

한국·중국·일본 ‘국사’대화의 가능성 (1)

■ 포럼의 취지

아즈미(渥美) 국제교류재단은 과거 2차에 걸쳐 아시아미래회의에서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일본 연구의 방향에 대해 검토해왔다. 2015년 7월에 도쿄에서 개최된 포럼 <일본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에서는 공공재로서의 일본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다. 1930년대의 중일전쟁에 이르는 과정이 말해주듯이, 경제·무역관계만으로는 평화를 확립할 수 없다. 그리고 종전 7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이 지역의 신뢰구축에 불가결한 ‘화해’가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전후 동아시아에서 부분적으로 화해는 달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는 정부 간 ‘전략적’ 판단과 민간의 ‘우호적’ 운동에 힘입은 것이며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현재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공유하는 ‘지(知)’를 기초로 한 화해다.

일본 연구를 이러한 ‘공공지’로 육성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시할 수 없다. 근대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다. 일본이 경험한 성공과 실패를 아시아 전체가 공유재산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역사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아즈미 국제교류재단은 2년 연속해서 ‘일본 연구’를 주제로 논의를 심화시켜왔다.

다음 단계의 과제는 ‘중국 연구’나 ‘한국 연구’도 ‘일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공공지’로 완성시킬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 나라가 ‘지’의 공유재산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인식의 차이를 의식하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세 나라의 연구자들 사이에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져왔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연구자’ 간의 대화는 여전히 깊지 않다. ‘국사들’을 대화하게 함으로써 공유 가능한 ‘일본 연구’, ‘중국 연구’, 그리고 ‘한국 연구’의 길이 열린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환경의 정비와 연구 성과의 발신은 동아시아 화해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SGRA

SGRA는 세계 각지에서 도입하여 장기간의 유학생생활을 거쳐 일본의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지일파 외국인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개인과 조직이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나 전략을 수립할 시에 도움이 되는 연구,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을 행하고, 그 성과를 포럼, 리포트, 홈페이지 등의 방법을 통해 널리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연구 테마별로 다분야, 다국적의 연구자가 연구팀을 편성하여 광범위한 지혜와 네트워크를 결집하여 다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고찰하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SGRA는 어떤 특정 전문영역이 아니라, 널리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폭넓은 연구영역을 포괄하는 국제적이고 학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구시민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 SGRA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SGRA 소식지 무료구독 안내

SGRA 포럼 등의 안내와 세계 각지로부터의 SGRA 회원의 에세이를 매주 1회 (수), 전자메일로 배신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지는 누구나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SGRA 사무국 (sgra.office@aisf.or.jp) 앞으로 메일 주소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중국·일본 ‘국사’대화의 가능성 (1)

일시 | 2016년 9월 30일(금요일) 9:00—12:30
회장 | 기타큐슈(北九州) 국제회의장 국제회의실
주최 | 아즈미 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関口) 글로벌연구회(SGRA)
공최 | (재)한국미래인력연구원, (재)아즈미국제교류장학재단

종합사회 | 평 하오 (彭浩, 오사카시립대학교 준교수)
개회사 | 이마니시 준코 (今西淳子, 아즈미 국제교류재단 상무이사)

※한중일 동시통역 제공

〈제1부〉 문제제기

왜 ‘국사들의 대화’가 필요한가 — ‘국사’와 ‘역사’의 사이 6

류 지에 (劉傑, 와세다대학교 사회과학총합학술원 교수)

한·중·일 세 나라가 지의 공유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세 나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대화가 진행되어왔으나, 각국의 역사 인식을 좌우할 ‘국사 연구자’ 간의 대화는 아직 심화되지 못하고 있다. ‘국사들’을 대화하게 함으로써, 공유 가능한 ‘일본 연구’, ‘중국 연구’ 및 ‘한국 연구’의 길이 열린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환경의 정비와 연구성과의 발신은 동아시아 화해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발표

발표 1)

한국의 국사(연구/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 10

조광 (趙珰,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역사를 둘러싼 논쟁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와 함께 각국에서는 역사교육에 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다시금 직시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의 역사 문제는 자민족중심주의와 국가주의적인 경향에 유래한다. 한국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근래 편찬되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그리고 학계의 일본관계사, 중국관계사의 서술을 바탕으로 이러한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발표 2)

중국 국사(연구/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
—13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사례로

16

거 자오광 (葛兆光, 푸단대학교 [復旦大學] 교수)

본고는 13—16세기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세 가지 역사적 사건, 즉 ‘몽고 침략’ (1274·1281), ‘쓰시마 정벌’ (1419), ‘임진왜란·정유재란’ (1592·1597)을 사례로 들어 개별 국가의 역사와 동아시아사의 차이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를 서술할 경우, 여러 개의 중심이 있으면 몇 개의 역사권이 나타나고 그 역사권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국가사와는 다른 부분도 꽤 나온다. 일국의 역사를 서술할 때 그러한 부분은 종종 간과되지만, 동아시아사를 서술할 경우 이 역사권이 겹치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발표 3)

일본 국사(연구/교과서)의 동아시아 서술

23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아토미학원 [跡見学園] 여자대학교 교수/도쿄대학교 명예교수)

일본의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은 모두 일본사와 세계사로 양분되어 있다.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일본인의 세계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과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를 별개로 간주하고, ‘일본은 세계(아시아)의 외부에 있다’는 세계관이다.

필자는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 이러한 세계관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최근 일본학술회의 역사학위원회에서 고등학교 역사교육에서 일본사와 세계사를 융합한 ‘역사기초’라는 과목을 신설할 것을 주창해왔다. 현재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제언을 참고로 차기 학습지도요령에서 이와 유사한 틀의 ‘역사종합’이라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는 현재의 일본사 교육이 일본 외부(外界), 특히 동아시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주요 교과서를 소재로 삼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미래의 일본사 연구 및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부>
토론

토론 1)

국민국가와 근대 동아시아

34

야오 케이스케 (八百啓介, 기타큐슈시립대학교 [北九州市立大學] 교수)

토론 2)

역사 인식과 개별 실증의 관계 —‘번국접소도’(蕃國接詔圖)를 사례로—

40

하시모토 유 (橋本 雄, 홋카이도대학교 [北海道大學] 준교수)

토론 3)	
중국 교과서에 서술된 일본	
—‘혁명사관’ 교육에서 ‘문명사관’ 교육으로의 전환—	44
마쓰다 마미코 (松田麻美子, 와세다대학교)	
토론 4)	
동아시아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하여	52
쉬 징보 (徐静波, 푸단대학교 [復旦大学] 교수)	
토론 5)	
‘국사들의 대화’ 진전을 위한 제언	55
정순일 (鄭淳一, 고려대학교 교수)	
토론 6)	
국사에서 용어 통일과 목표 설정 문제	58
김경태 (金國泰,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원탁회의·토론	60
사회 : 남기정 (南基正, 서울대학교 부교수)	
토론 :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기타 참가자	

폐회사 : 리 엔민 (李恩民, 오비린대학교 [桜美林大学] 교수)

후기 68

발표자 및 토론자 약력 72

문제제기



왜 '국사들의 대화'가 필요한가: '국사'와 '역사'의 사이

류 지에 (劉傑, 와세다대학교)

머리말

우선 '국사들'이라는 타이틀에 대한 것인데, 그저 '국사'가 아니라 굳이 '국사들'이라고 한 것은 이마니시 준코(今西淳子) 아즈미 국제교류재단 상무이사의 발안이다. 이 '국사들'이라는 어법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연구·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아시아 삼국에는 각각의 역사교육 혹은 교육의 내용, 연구의 내용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들 간에는 반드시 대화가 풍성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각국은 각자의 관점에서 자국의 역사를 연구·교육해왔다. 이 삼국의 '국사'들을 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국사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

둘째, 국사 연구자들을 가리킨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지금까지 공동연구 형태로 여러 가지 교류를 거듭해왔지만, 연구자들 사이의 교류의 실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교류에 참가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는 각각 자기 나라의 국사를 연구하는 선생님들이라기보다는 상대국의 근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느 정도 상대국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혹은 가까운 연구자들 사이의 교류였다. 실제로 각각의 나라에서 국사를 연구하거나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반드시 충분한 교류를 해오지 못했다는 상황이 존재한다. 이 '연구자'들을 서로 대화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사들의 대화'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오늘의 문제제기에서 저는 두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무엇보다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를 경청하고자 한다.

1. 왜 '국사'들의 대화가 필요한가?

최근 십 몇 년 동안 동아시아 삼국의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대화는 다양한 성과를 낳았다. 중일 간의 역사대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끈 것은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실시된 공동연구다. 2006년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대신의 중국 방문 시에 중국과 일본의 두 정상은 양국 지식인에 의한 역사 공동연구를 연내에 발족시키기로 합의하였다. 2006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모두 4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였고, 2010년 1월에는 양국 위원들이 쓴 자국어 논문을, 또 9월에는 그 논문의 번역문을 발표하였다. 중일 관계에서 이러한 시도는 처음 있는 일로서 그 의의가 크다.

서로 다른 나라의 연구자들 간의 '대화'는 보통 두 가지 차원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연구회나 학회의 장을 이용하여 직접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연구성과를 매개로 상대방과 간접적으로 부단히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중일 역사공동연구는 비록 횡수는 적었지만, 국사 연구자끼리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었다. 최근 이와 같은 대화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상호 이해도 깊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공동연구의 근대사 분과 연구보고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측 논문은 중국측 연구자의 기존 연구성과나 중국측 사료를 거의 참고하지 않은 채로 작성되었다. 반면, 중국측의 연구보고는 일본측 사료나 연구성과를 방대하게 활용하고 있다. 즉, 양국의 역사 해석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근대 중일 관계사 연구는 일본측의 사료와 선행 연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현황 속에서 일본측 연구자에게 중국의 연구성과와 대화할 필요성을 인식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면, 중국측 연구는 필요에 따라 일본측 사료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사료와의 대화가 반드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중일의 역사인식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연구자끼리 국경을 넘어 '지(知)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공동체 구축을 위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대화가 적었던 국사 연구자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사료나 연구성과와 대화할 수 있는 연구자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사'에서 '역사'로

1990년대에 일본의 대학들은 '국사학과'를 '일본사학과'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의 국제화에 대응했다. 교토대학 일본사학전공의 소개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일본 '국사'교육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일본사학은, 이곳 일본열도에서 생겨나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줄곧 변해온 사회와 문화를 총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입니다. (중략) 물론 일본사학전공에서도 많은 유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들에게 일본사는 외국의 역사입니다. 그런 만큼 '일본인의 일본사'만을 연구하는 곳은 아닙니다. 또 일본 사회·일본 문화는 고립되어 존재해온 것이 아니기에 동서양 여러 지역과의 관계도 중요한 연구테마가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포함해서 일본의 대학에서 일본 역사를 연구하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

일본에서 '국사'가 '일본사'로 변화해가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1990년 당대(當代) 중국연구소를 설립하여 '중화인민공화국사'의 편찬과 사료의 출판을 시작하였다. 그 후로 중국에서는 '국사'의 개념이 널리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사'를 사용하지 않게 된 일본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물론 중국에서는 '당사(黨史)'와의 차이를 강조

하기 위하여 '국사' 를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중국에서는 '중국사' 와 '세계사' 를 통합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 서술은 가능한 것인가? 지(知)의 공동체를 모색하는 가운데 그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대화 가능한 '국사' 연구자 육성

근래에 와서 대학의 국제화에 따라 자국 내의 '국사' 와 '세계사' 의 대화가 크게 진전을 보이는 듯하다. 이는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이고 유학생에 대한 교육체계를 정비한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 속의 일본' , '세계 속의 중국' 과 같은 표현을 빈번하게 듣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일본연구는 아직 발전도상에 있으며, 일본의 '국사' 와 대화할 수 있는 중국의 '국사' 연구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양국의 '국사' 연구자는 번역된 사료나 연구성과를 통하여 상대국의 연구자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중국의 일본사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이노우에 기요시(井上清)의 『일본의 역사(日本の歴史)』였다. 이 책은 1974년에 텐진출판사(天津出版社)에서 출판된 후로 일본역사의 표본이 되었으며, 2011년에는 산시인민출판사(陝西人民出版社)에서 재발간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국사' 연구는 아시아 및 세계와 어떻게 거리감을 유지할 것인지가 커다란 과제가 되었으나, 최근 2년간 『일본역사(日本歴史)』에 게재된 논문을 검토하면 알 수 있듯이, 외국사의 관점을 도입한 '국사' 연구는 적다. 매년 9월호 특집으로 기획되는 '좌담회, 일본역사의 논점·쟁점'의 주제만 봐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고세이바이시 키모쿠 42조론(御成敗式目四二条論)', '고대 여제(女帝) 연구의 현재', '쇼와천황실록(昭和天皇実録)』을 읽다: 전전기(戰前期)의 정치·군사·제국', '보신전쟁(戊辰戦争) 연구의 현황과 과제' 등에서 보는 것처럼 지극히 '국사' 적이며, 중국과의 접점이 적다. 최근의 『쇼와천황실록』을 테마로 한 연구는 전전의 정치와 외교에 관한 것인데, 예년과 달리 중국과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국사' 들의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사' 들의 대화를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려면 지금과 같이 연구자 교류를 추진함과 동시에,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 본격적인 국사들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유학생이 증가하는 오늘날, 쌍방의 연구자가 협력태세를 갖추고, 일본의 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중국사 연구자와 중국 등 아시아 언어와 사회문화에 정통한 일본사 연구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동시에, 중국에서의 일본연구 발전에 협력할 태세를 강화해야만 한다. 최근에 본 발표자가 관여하고 있는 '중일근대사사전' 편찬 프로젝트는 '국사' 들의 대화이자, 신진 국사연구자를 위한 환경 정비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오늘 원탁회의에서는 '교과서' 를 통해 각국 '국사' 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본 발표자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장래에 교육과 연구의 두 차원에서 진정한 '국사' 들의 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2015-2016년 『日本歴史』에 게재된 논문 주제

계재호수	주제	저자
2015년 2월	藤原房前と河内山寺・興福寺福田院	谷本 啓
	室町期荘園制下の在地勢力と五山制度	斎藤夏来
	天保期水口藩の家中騒動	荒木裕行
	平時における政軍関係の相克—軍隊の雪害対応を中心に—	吉田律人
2015년 3월	隼人の「名帳」	菊池達也
	「申」型裁許状の再検討	黒須智之
	江戸町名主馬込勘解由の明治維新	高山慶子
2015년 4월	江戸・明治期の日露関係—ロシアイメージを中心に—	黒沢文貴
	宛所を輻射状とする伊達政宗書状	羽下徳彦
	『寛政重修諸家譜』の呈譜と幕府の編纂姿勢	平野仁也
2015년 5월	浜口内閣期における陸軍の対内宣伝政策	藤田 俊
	中世における誕生日	木下 聡
2015년 6월	台湾出兵と万国公法—欧米諸国の対応を中心に—	小野聡子
	源経基の出自と「源頼信告文」	藤田佳希
	後北条領国における新宿立て—原兵庫助訴状の検討—	山下智也
	近世後期の天皇避諱欠画令	林 大樹
	戦争芝居と川上音二郎—『壮絶快絶日清戦争』の分析をもとに—	伊藤俊介
2015년 7월	徳川家達と大正三年政変	原口大輔
	陽成・光孝・宇多をめぐる皇位継承問題	佐藤早樹子
2015년 8월	近世西日本の皮革流通と地域—筑前国熊崎村を事例に—	高垣亜矢
	昭和のなかの「明治」—明治百年記念準備会議を中心に—	小池聖一
2015년 9월	足利義昭の大名交渉と起請文	水野 嶺
	江戸周辺の地域編成と御三卿鷹場	山崎久登
	「精神的共同作戦」としての日独文化事業—一九四三～四四年の日本における展開—	清水雅大
2015년 10월	山陰道節度使判官の長門守任官	松本政春
	戦国期越後における長尾晴景の権力形成—伊達時宗丸入嗣問題を通して—	前嶋 敏
2015년 11월	公事方御定書の受容と運用—長崎奉行の「江戸伺」を通して	安高啓明
	衛生組合連合会と市制	白木澤涼子
2015년 12월	『続日本後紀』の編纂—その原史料を中心に	多田圭介
	南北朝期大内氏の本拠地—弘世期を中心に	平瀬直樹
	日露戦前の水道敷設と地方都市政治—岡山市水道敷設問題をとおして	久野 洋
2016년 1월	出羽国の東山道移管と陸奥按察使	永田英明
	佐賀藩築地反射炉と鉄製砲	前田達男
	昭和研究会の組織と参加者	山口浩志
2016년 2월	当任加挙考—平安時代出挙制度の一側面	神戸航介
	南北朝末期の醍醐寺三寶院院主と理性院院主—宗助の座主就任の背景	小池勝也
	備中一橋領における年貢取納と石代納—安石代と間銀の問題を中心に	東野将伸
	明治期陸軍における歩兵科連隊将校団の構造	大江洋代
2016년 3월	三好本宗家と阿波三好家—洲本・尼崎会談を事例として	高橋 遼
	長崎「海軍」伝習再考—幕府伝習生の人選を中心に	金 蓮玉
2016년 4월	日露戦後養蚕業の発展構造—西日本地域の成長と勸業政策・村落	加藤伸行
	律令官人の朝儀不参をめぐって	虎尾達哉
	織田信長の上洛と三好氏の動向	天野忠幸
2016년 5월	細川幽斎島津領「仕置」の再検討	畑山周平
	阿衡の紛議における「奉昭宣公書」	鴨野有佳梨
2016년 6월	明治二四年の皇室会計法制定—「御料部会計ノ部」の全章修正	池田さなえ
	足利義昭政権と武田信玄—元龜争乱の展開再考	柴 裕之
	大念仏信仰の近世教団化と宗派間関係—宗派の形成をめぐる諸相	下田桃子
2016년 7월	近代東京における寺院境内墓地と郊外墓地	鈴木勇一郎
	百濟滅亡後における倭国の防衛体制—斉明紀「繕修城柵」再考	堀江 潔
	揺れる後花園天皇—治罰論旨の復活をめぐって	田村 航
	近世長崎貿易での盈物の取締りと刑罰—長崎天保改革を転換点として	五味玲子
2016년 8월	華族の期待と三条実美の政治行動	刑部芳則
	大化前代の隼人と倭王権	菊池達也
	安政四年における大廊下席大名の政治的動向—「同席会議」の上申書提出をめぐって	篠崎佑太
2016년 9월	ワシントン条約廃棄問題と統帥権	藤井崇史
	駿遠両国における今川了俊・仲秋とその子孫	星川礼応
	終戦期の平沼騏一郎	手嶋泰伸

발표 1



한국의 국사(연구/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동아시아

조광 (趙珖,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머리말

한국, 일본, 중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에서 역사를 둘러싼 분쟁이 어느 시기보다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각국에서는 역사교육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자민족 중심주의와 국가주의적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역시 여기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한국의 역사교과서도 일국사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¹ 근래에 편찬되어 학교에 공급되었던 교과서, 그리고 학계의 일본관계사, 중국관계사 서술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전근대 중국에 대한 서술

우리에게 ‘중국’은 공간적으로 현재 중국 지역을 차지하던 나라들을 부르는 대명사다.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중국 역대 왕조의 역사를 하나의 중국사로 인식하고, 전근대에 동아시아의 패자는 늘 중국 지역에 세워졌던 나라들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중국 중심의 세계 인식이 한국사와 가장 심각하게 충돌하는 것은 고구려사 부분이다.

교과서에는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였다.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정치제도를 완비한 대제국을 형성하여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힘을 겨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북아시아란 중국을 뺀 동북아시아를 의미하는가. ‘중국과 대등한 지위’라 할 때의 중국은 어느 나라를 말하는가. 이런 고구려사를 둘러싼 혼란은 다음과 같은 서술을 받아들일 수 없어 거듭 전쟁을 도발했고, 그것이 고구려 멸망의 원인임에도, 신라가

1 이상, 고영진, 「한국사 교과서에서 보이는 전근대 일본」, 『역사문화연구』 25, 2006에서 인용

강자 중국의 ‘당’ 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일종의 ‘화이의식’ 에 근거한다. 이는 북방민족에 대한 서술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고려 시기부터는 거란, 여진은 침략을 일삼으며 은을 갖고 와서 농기구, 식량과 교환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정복하고 침략해도 상관없는 오랑캐일 뿐이다.

조선시대 서술에서는 명과의 관계에서 다시 한 번 ‘선진문물을 흡수하려는 문화외교’ 라는 서술이 등장한다. 북방민족인 여진에 대해서는 ‘회유와 토벌의 교린책’ 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그리고 청에 대한 설명 중 이런 서술이 보인다. “조선에 조공을 바쳤고 조선에서도 오랑캐로 여겨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군신관계를 맺고 굴욕적인 항복을 했다는 것이 조선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후 오랑캐에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운동이 전개되었다”. “청과 형식적인 사대관계를 맺었다”. 게다가 청의 발전을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의 전통문화를 보호, 장려하고 서양의 문물까지 받아들여 문화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갔다”. 오랑캐인 여진족이 세운 청이 한족의 문화와 서구 문명을 결합하여 문화국가가 되었으나 우리는 형식적인 사대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한족의 전통과 근대의 적자인 서구의 문명을 흡수하여 문화국가로 면모를 바꾸는 데 성공했지만, 오랑캐는 오랑캐라는 것이다.²

2. 전근대 일본에 대한 서술

전근대 중국에 대한 서술에서는 중국이라는 대명사가 자주 등장하는 반면, ‘일본’ 이란 단어 사용에는 인색하다. 왜 (倭) 혹은 왜구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하다. 본래 일본이라는 국호는 7세기 후반 왜국이 바뀌면서 등장한 것이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백제는 일본 큐슈 지방에 ‘진출’ 했고, 변한은 왜에 철을 수출했으며, 백제부흥운동에서는 다시 왜의 수군이 백제부흥군을 지원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왜와 일본의 경계가 모호하다.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문화를 설명할 때는 일본이라는 국호만을 일관되게 사용한다. “삼국문화는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 고대 문화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는 것이 결론이고 그 구체적 내용도 보인다. 그런데, 고려시대로 오면 일본은 사라지고 왜구만 등장한다. 왜구에 대한 정의는 없다. 왜구의 고려에 대한 침략의 역사만을 서술한다. 일본의 중앙정권에 대한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도 일본과의 관계는 왜구로 시작된다. “계속된 왜구 약탈로 인해 쓰시마를 정벌했다” 고 한다. ‘대마도 정벌’ (혹은 기해동정) 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침략이다. 우리의 이중 잣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본은 침략했고, 우리는 토벌하고 진출했다. 물론 ‘임진왜란’ 과 일체의 식민지 지배를 놓고 침략의 정도를 비교할 수는 없다. ‘대마도 정벌’ 이후 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3

2 김정인, 「동아시아사의 재구성 : 고등학교 『국사』 · 『한국근 · 현대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08에서 인용

포를 개항했다는 서술이 이어진다.³

임진왜란은 조선의 땅에서 조선과 명이 일본과 싸운 전쟁이다. 즉 세 나라가 공유하는 역사다. 현대 한국 학계에서 임진전쟁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민족적 저항과 극복이라는 '경험의 역사' 로 여겨졌고 가장 뜨거운 관심이 기울여진 연구 분야 중 하나다. 임진전쟁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고통을 정서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와 같았다. 대외팽창기의 일본이 이 전쟁을 침략전쟁의 필연성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고 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임진전쟁 연구는 식민지배로 인한 고통을 덜기 위한 분야였던 것이다.

연구 주제로서는 의병들의 활동과 이순신의 해전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연구사의 경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방의 양반이나 일반 백성, 그리고 이순신 등의 영웅 덕분에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공통된 시각을 보인다. 이들의 활약은 물론 역사적 사실이었으나 무능한 정부—일본의 침략—영웅들에 의한 극복이라는 구도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개별 주제를 넘어 통사적인 임진전쟁 연구도 진행되었으나,⁴ 위와 같은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와 같이 오랜 정치적·사회적 폐단으로 인해 조선 조정이 침략에 대처할 수 없었다거나, 조선 조정이 수도까지 버리기에 이르렀으나 의병과 전쟁 영웅의 활약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평가는 사실 유성룡의 징비록(『懲愆錄』) 등 조선의 역사서에서 보이는 상투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이 부분만을 떼어 놓고 보자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전 일본의 연구도 유사한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⁵ 이들 연구는 각각 시대의 필요에 의해 다른 목적 아래에서 진행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유사한 방식으로 전쟁을 서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시각이 지닌 문제를 지적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이러한 연구 역시 한국의 임진전쟁사 연구가 승리와 패배, 선과 악, 선진과 후진을 논해야 한다는 관념에서 완전히 탈피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이상과 같이 한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임진전쟁 연구사의 고전적 경향

3 김정인, 「동아시아사의 재구성: 고등학교 『국사』 ·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08

4 崔永禧, 「壬辰義兵의 性格」, 『史學研究』 8, 1960; 李相佰, 「第2編 第6章 倭亂과 對外關係」, 『(震檀學會) 韓國史近世前期篇』, 乙酉文化社, 1962; 최영희, 「임진왜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 金錫禧, 「壬辰亂 中の 講和交渉에 對한 小考」, 『文理大學報』 9, 釜山大學校 文理科大學, 1966; 李炯錫, 『壬辰戰亂史』 上·下, 壬辰戰亂刊行委員會, 1967 (李炯錫, 『壬辰戰亂史』 上·中·下, 新現實社, 1974 등으로 중보개정); 李鉉淙·崔永禧, 「外族의 侵寇 1.16世紀後半期 東亞의 情勢, 2. 日本의 侵寇」, 『한국사 12 조선양반사회의 모순과 대외항쟁』, 국사편찬위원회, 1977; 최영희·송정현·조원래·손종성·이장희·장학근, 「임진왜란」, 『한국사 29 조선 중기의 외침과 그 대응』, 국사편찬위원회, 1995

5 일본의 침략과 전쟁 초반 조선의 참패에는 정치가 문란하고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조선의 책임도 있다는 식의 서술은 『양조평양록(兩朝平壤錄)』 『징비록』 『무비지(武備志)』 이래, 이러한 저작을 접한 이후 저술된 일본의 문헌들에도 받아들여졌다. [김시덕, 「근세 일본의 대외전쟁 문헌군에 대하여」, 『임진왜란 관련일본 문헌 해제』, 도서출판 문, 2010 (金時德, 『異國征伐戰記の世界: 韓半島·琉球列島·蝦夷地』, 笠間書院, 2010의 요약)]. 이러한 논리는 19세기 후반 이후 일본의 대외팽창과 침략전쟁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저술에 이용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의 학계는 회귀와 반복을 통해 위와 같은 서술을 재생산해왔다.

6 許善道, 「壬辰倭亂論—올바르고 새로운 認識—」, 『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社, 1985; 崔永禧, 「壬辰倭亂의 再照明」, 『國史館論叢』 30, 1991; 崔永禧, 「壬辰倭亂에 對한 理解의 問題點」, 『韓國史論』 22, 國史編纂委員會, 1992; 崔永禧, 「壬辰倭亂에 對한 몇 가지 意見」, 『南冥學研究』 7, 1998

은 대체적으로 강화교섭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강화교섭에 대해 서술한다 할지라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리한 요구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명 조정의 책봉이라는 간극을 메우기 위한 기만에서 비롯된 실패로만 그릴 뿐이다. 강화교섭은 전쟁에 대한 유용한 설명 틀로 사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삼국의 역학구도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대체로 그러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

강화교섭이 이처럼 도외시되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먼저 일본의 대외 팽창이 진행되던 시기의 연구에서 강화교섭은 일종의 치욕적 사태로 취급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중국을 침략의 대상으로 삼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야망을 꺾기에 이르는 과정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월정’의 실패는 강화교섭을 담당자 자신의 거짓 때문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강화교섭은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부여받지 못했던 것이다.

해방 후 한국 학계에서는 국난극복사라는 연구경향 속에서 조선이 일방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호소가 요구되었고, 조선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그리고 복수전을 방해한 강화교섭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의 일본에서는 전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의 분위기를 반영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강화교섭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외면당하거나 이전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서술방식을 반복하고 있었다. 해방 후 한일 양국의 연구사적 분위기는 모두 강화교섭 그 자체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꺼리고 있었다.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전쟁의 모습과 다른 방향의 흐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그런 만큼 강화교섭에 관련한 많은 사료들이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다.

한편, 위의 연구들을 비롯하여 임진전쟁 당시 조선과 명 사이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대개 명이 조선에 참전한 중요한 이유가 일본군의 침략을 조선 영토에서 저지하여 자국 영토를 보호한다는 것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며, 그것들은 주로 전쟁 기간 동안 조선에 자국의 논리를 강요하였던 명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저항하려했던 조선이라는 구도 위에서 서술되었다.⁷

한편,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다루는 임진·정유 전쟁과 정묘·병자 전쟁은 한국사 연구와 교육에서 말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다. 이렇게 다른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 전쟁에서 배워야 할 것을 다르게 잡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사는 ‘갈등 해소와 평화추구’를 궁극적인 교육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임진·정유 전쟁과 정묘·병자전쟁을 배우면서 평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전쟁의 배경과 발생원인, 전쟁의 피해 등은 교육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그러나 동아시아사의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에서는 전쟁을 배우면서 평화를 생각하게 하는 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 결정적 이유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교과서의 집필기준에 있었다. 즉 전쟁의 원인보다는 전쟁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전쟁의 영향에서는 전쟁의 피해에 못지않게 문화적 측면에서의 전쟁의 긍정적 영향을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이 개정될수록 과목 신설을 결정하

7 김경태,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는 가운데,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전근대사 서술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이 형성되고 지속되었다는 것을, 근현대사 서술에서는 지역의 현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각각 강조하는 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 개정될 교육과정에서는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이라는 내용에 대해,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난 원인과 영향을 동아시아 국제 관계와 각국의 정치, 사회를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⁸

교과서에서 조선통신사에 관한 서술 역시 편향적인 면을 드러내고 있다.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보인다. "도쿠가와 막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 재개를 요청하였다".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도쿠가와 막부의 쇼군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 파견을 요청하였다". "통신사는 외교 사절로서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 서술에서 일본은 여전히 조선의 선진 문화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술은 17세기 이후 일본이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 크게 발전했다고 하는 그 교과서의 개관의 서술과 충돌한다. 일본이 네덜란드 등을 통해 서구문물을 수용하며 발전했지만, 여전히 조선으로부터 선진 문물을 들여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인가. '근대의 세계'에서는 일본의 발전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19세기에 서양 열강과 타협하여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끼이게 되었다". 일본의 근대 발전을 타협이라는 명사와 끼인다는 피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⁹

전체적으로 교과서에 보이는 전근대 일본의 모습은 문화후진국으로서 선진문화의 수혜자, 침략자, 약탈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근현대의 식민지수탈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수혜자, 침략자, 약탈자로서의 전근대 일본의 모습은 일면 타당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러한 일본의 이미지가 교과서 발행과 서술제도 등 우리 내부의 잘못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을 하나의 관계 주체로 보지 않는 『국사』 교과서의 일방통행적인 인식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현재 복잡하게 얽혀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바람직한 한일관계 서술은 과거 역사의 전개가 그랬듯이, 일국사가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넓은 시각에서, 관계사적인 측면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경계의 역사학'이 아닌 '관계의 역사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양의 국제 역사교과서 협력운동을 모범으로 삼아 한·중·일 3국의 양식 있는 학자와 교사, 시민단체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교류와 협력 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¹⁰

8 차미희,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분석」, 『한국사학보』 56, 2014에서 인용

9 김정인, 「동아시아사의 재구성: 고등학교 『국사』 ·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교육학회 학술대회지』, 2008

10 이상, 고영진, 「한국사 교과서에서 보이는 전근대 일본」, 『역사문화연구』 25, 2006

3. 근대 동아시아에 대한 서술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물론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 중국과 일본의 근현대사에 관한 내용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19세기 이후 동아시아는 일국의 상황만으로 자국사를 기술하는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삼국의 역사가 상호 얽혀 있다. 그런데, 교과서는 이런 역사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강화도 조약을 비롯해서 문호 개방과 임오군란 당시 청에 원병을 청하는 과정부터 시작되는 근대사는 일본과 청이라는 상대의 대응이 어떤 ‘사정’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 역사 현실과 관련된 그들의 대응만을 현상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왜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중국의 만주가 독립운동의 기지 역할을 했는데, 왜 다른 나라 땅에서 독립운동이 가능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는다. 일본의 약탈성이 식민지화의 원인이었고 식민통치를 통해 그 점이 재현되었다는 전제하에 현상적인 식민 지배와 그에 대한 우리의 저항만을 가르치고 있다. 상대가 약탈국가 일본이니 더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이다.

현대사도 일본은 침략자, 중국은 독립운동의 기지이자 지원세력이라는 이미지만 현상적으로 반복된다. 동아시아 역사상 자체가 전무한 근대사와 사정이 대동소이하다. 1945년 이후 한(북한 포함)·중·일 상호간에는 ‘단절’의 역사가 지속되었고 지금도 아직 이어지지 않은 역내 관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의 현실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서술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하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세계사 교육에 등장하는 대표적 국제전인 한국전쟁의 경우도 국제전에 참가한 각국의 논리가 소개되어 있지 않다. 미국, 소련, 중국은 물론 다른 나라들의 참전과 개입에 대한 설명에 인색하다. 다른 시대보다 근현대의 경우, 중국사는 물론 일본사와 연결해서 설명해야 맥락의 이해가 가능한데도, 이런 문제의식, 즉 동아시아라는 관점이 기존의 역사 교육에는 없다. 나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도 나를 돌아보게 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¹¹

앞으로 편찬될 역사교과서에서는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주변국들에 대한 서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1 고영진, 「한국사 교과서에서 보이는 전근대 일본」, 『역사문화연구』 25, 2006

발표 2



중국 국사(연구/교과서)의 동아시아 기술: 13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사례로

거 자오광 (葛兆光, 푸단대학교 [復旦大學] 교수)

머리말

근세 동아시아사, 특히 13세기 이후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일국사(一國史)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동아시아사 과정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필자는 ‘몽고의 침략’ (1274·1281), ‘쓰시마 정벌’ (1419),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 (1592·1597)이라는 세 사건을 예로 들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들 세 사건은 모두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국사인 국사에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일국사’와 ‘동아시아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또 자국의 입장만을 고수한다면, 역사연구에 어떤 ‘사각’ (死角)이나 ‘맹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중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사 저작인 ①전백찬(翦伯贊)의 『중국사강요』(中國史綱要) ②범문란(范文瀾)의 『중국통사』(中國通史) ③곽말약(郭沫若)의 『중국사강』(中國史綱) ④백수이(白壽彝)의 『중국통사』(中國通史)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동시에 중국대륙과 타이완, 홍콩에서 출판된 역사교과서를 참조하여 중국의 통사류 저작, 특히 역사교과서에 관해 간략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1. ‘몽고 침략’에 대한 각국의 인식

‘몽고침략’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중의 하나이다. 가와조에 쇼지(川添昭二)는 『몽고습래연구사론』(蒙古襲來研究史論)에서 몽고의 침략이라는 사건은 최종적으로 정복이나 식민지에 이르는 엄청난 사태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인의 역사 기억에 크나큰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일본의 역사문헌에서는 이와 관련된 회상이나 상상 또는 묘

사가 반복되었다.¹ 대표적인 일본사 연구자인 하라 가쓰로 (原勝郎) 나 대표적인 중국사 연구자인 나이토 코난 (内藤湖南), 이 두 사람은 다 같이 이 사건이 일본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문화는 독립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때부터 일본은 처음으로 ‘신국’ (神國) 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일본인은 의식적으로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켜 중국 중심의 ‘화이질서’ (華夷秩序) 에서 벗어나 이른바 일본형 ‘화이질서’ 를 형성했던 것이다.

또한 13 세기에서 14 세기에 걸쳐 고려에게도 몽고라는 요인은 역사상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 몽고의 간섭을 받았던 고려시대에 몽고가 일본을 침략할 때 고려는 그 전초기지가 되었고, 몽고제국이 사방으로 진출할 때도 고려인은 수시로 징병을 당했다. 고려의 여인들은 몽고인을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 받았으며, 탐라 (耽羅) 라 불린 제주도도 몽고인의 말을 기르는 목장이 되어 버렸다. 게다가 고려는 몽고에서 왕비를 맞이해야만 했으며 사람들의 이름도 몽고식이 되고 관리들도 몽고풍의 변발을 하는 등 나라가 전반적으로 ‘몽고화’ 되어 버렸다.² 그러므로 한국사에서도 몽고의 침략은 커다란 역사적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 서적에서 몽고·원나라는 ‘자국사’ 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건은 보통 ‘중외관계사’ (中外關係史) 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자국’ 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웃나라를 침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기이하게도 중국의 역사연구자는 몽고·원나라를 자국의 한 왕조로 간주하기 때문에 몽고와 일본 및 고려 사이에서 일어난 이러한 사건을 ‘중외관계’ 의 범주에 포함시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듯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침략이나 팽창행위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몽고제국’ 의 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즉, 몽고인은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수립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팽창행위가 동반되었다는 식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건은 중국의 역사서술 중에서 대단한 사건은 아닌 듯하다. 단지 ‘중외관계’ 의 범주 내에서 발생한 미미한 사건에 지나지 않는

1 가와조에 (川添昭二) 의 『蒙古襲來研究史論』 (東京雄山閣, 1977) 은 몽고의 침략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본에 끼친 심각한 영향에 관해 자세히 논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일찍이 1293년을 전후하여 이미 히고국 (肥後國) 의 무사 다케자키 스에나가 (竹崎季長) 의 무공을 그린 『몽고습래회사 (蒙古襲來繪詞)』 (京都東山御文庫藏, 二卷) 가 있었다. 그 후 에도시대에 임제종 승려 즈이케이 슈호 (瑞溪周鳳) 의 『선린국보기 (善隣國寶記)』 (1470년 증보), 유학자이자 의사 (儒醫) 인 마츠시타 겐린 (松下見林) 의 『이칭일본전 (異稱日本傳)』 (上中下 三卷, 1688년 자필 서문 수록), 쓰야마 모토준 (津山元順, ? -1784) 의 『몽고습래기 (蒙古襲來記)』 및 그의 양자인 쓰야마 모토즈라 (津山元貫, 1734-1815) 의 『참고몽고입구기 (參考蒙古入寇記)』 등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 후 다시 다양한 관계서적, 예컨대 『원구시말 (元寇始末)』, 『몽고구기 (蒙古寇記)』, 『몽고제군기변이 (蒙古諸軍記弁異)』, 『원구기략 (元寇記略)』 등이 출판되었다.

2 미야자키 이치사다 (宮崎市定) 가 말하는 것처럼, “중세 이래 조선이 가장 외국화되었던 시대는 이 때 (고려 충렬왕 이후) 다” .宮崎市定, 『中国史』 (中国語訳, 浙江人民出版社, 2015年) 第三篇「近世史」三「元」, 237쪽; 고려 우왕 때 (1376년, 명나라가 수립된 지 8년째) 에도 고려는 여전히 북원 (北元) 의 연호인 ‘선광’ (宣光) 을 사용하며 사신을 파견했다. 동시에 고려에서는 “이미 마을에서 몽고풍 의복 (胡服) 이나 변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 “명나라 사신이 올 때 당국은 황급히 ‘호복’ 금지령을 내리고 명의 제도에 따라 백관관복 (百官冠服) 을 지정했다” . 오함 (吳晗) 이 정리한 『李朝實錄中有 明 清 史料』 第一冊, 76-79쪽.

다.³ 대부분이 간략한 서술에 그치고 있으며,⁴ 어쩌다 분석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논조가 섞여있는 상태다.⁵

2. '쓰시마 정벌' 에 대한 각국의 인식

이른바 '오에이의 왜구' (応永外寇, 1419)는 쓰시마 정벌에 대한 일본측의 표현이다. 14세기 후반에 동아시아에서는 정국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의 경우, 원나라가 명나라로 교체되고 몽고 제국이 한족(漢族) 왕조로 바뀌었다. 한반도에서는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고 이성계가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여 대명제국(大明帝國)의 승인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가 분열상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실현하였으며, 나아가 명의 조공체제에 편입되려는 자세를 보인다. 명나라 초기, 특히 정권 수립 직후 홍무제(洪武帝)는 국제협조정책을 확립하고 몇몇 '정벌대상이 아닌 나라' 명단을 만드는 등, 동아시아 3국으로 이루어진 '국제사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나 영락제(永樂帝)는 홍무제의 '국제협조' 정책을 변경하여, 안남(安南)으로 출병하고 조선에 대해 압박을 가했다. 한편, 이성계와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1408년에 사망함에 따라 일본과 조선 두 나라의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후계자인 아시카가 요시모치(足利義持)는 아버지의 정책을 변경하여 아시카가 요시미츠 시대의 온건한 외교방식을 일변시켰으며 조선을 업신여기는 듯한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⁶ 그러나 상황은 요시모치가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조선의 태종도 강경한 성향의 국왕이었고 오히려 1419년에는 일본의 쓰시마에 대한 정벌이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오에이의 왜구' (応永外

3 전백찬(翦伯贊), 『中国史綱要』(北京大学出版社, 增補本, 2006) 下, 449쪽의 「원의 대외관계」 서술에는 “원나라 세조 때, 수차례 병사를 이끌고 이웃나라를 침범했다”. “원나라 11년(1274)과 18년(1281), 두 차례나 일본에 출병했다”는 표현 밖에 없다. 또 『중국사고(中国史稿)』(人民出版社, 1983)에는 4백여 글자의 서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나라 3년부터 10년까지 전후 5회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에 사신을 보낼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본정부는 모두 회답을 거절했다”고 하는 구절이 있다. 두 차례 출병한 것에 대한 서술은 있지만 특별히 분석을 하지는 않는다. 범문란(範文瀾), 『중국통사간편(中国通史簡編)』(河北教育出版社, 2000年 增刷)에는 ‘몽고 침략’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현대에 와서도 최근의 각종 역사서, 예컨대 이학근(李学勤)·곽지곤(郭志坤) 편저, 『중국역사상술총서(中国歷史詳述叢書)』 중, 온해청(溫海清), 『원사(元史)』(上海人民出版社, 2015年)에서도 이 사건을 무시하고 있다.

4 대조적으로 서양의 학자, 예컨대 티모시 브룩(Timothy Brook)은 원과 명나라의 역사에 대한 서술에서 ‘몽고 침략’의 의미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Timothy Brook, *The Troubled Empire: China in the Yuan and Ming Dynasties*, “History of Imperial China 5”,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5 예컨대 일찍이 유명한 중국의 역사교과서, 즉 무봉림(繆鳳林) 『중국통사요약(中国通史要略)』(南京鐘山書局, 1933; 商務印書館, 1946) 제8장에는 이 두 차례의 출병을 통해, “일본인은 몽고군의 무위(武威)를 두려워하게 되었으며,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서술이 보인다. 116쪽.

6 예컨대, 조선에 대해 ‘국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징이대장군(征夷大將軍)’이라고 부르고, 국서(國書)에도 ‘일본국 미나모토 요시모치(日本国源義持)’라고만 적었다. 즉, 일본의 대장군은 조선 국왕과 대등한 관계임을 보이고, 나아가 조선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명의 ‘영락(永樂)’ 연호를 사용한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만약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임을 자처한다면, 일본도 마찬가지로 명의 속국으로 격하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시카가는 생각한 것이다.

寇)라 불리는 사건으로서,⁷일본의 조야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사건은 당시 ‘몽고 침략’ 과 같은 정도로 일본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했다고 생각하

는 사람도 있다. 조선과 명의 연합군에 의해 일본이 양면으로부터 적의 공격을 받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일본은 부득이 외교정책을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⁸ 그 해 12월 전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하카타(博多) 묘라쿠지(妙樂寺)의 승려 무가이 료게이(無涯亮倪)를 조선에 파견했고, 양국 관계는 겨우 진정되었다. 이 사건은 이후 균형 잡힌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재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어쩌서 이 사건이 동아시아사에서 그토록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명나라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 조선이 출병한 데에는 말할 것도 없이 명나라의 지지, 적어도 목인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명 태조는 조선에 대해, 조선의 당면 임무는 왜구를 토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은 주민을 해안지역에서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한편, 군대를 동원하여 일본이 점령한 섬을 포위하고 적을 섬멸시킬 것을 제안했다.⁹ 명나라 영락(永樂) 연간에 이르러 영락제는 다시금 명 태조의 국제협조정책을 대폭 변경하여 대외강경책으로 돌아선다. 조선으로부터 “일본이 군함을 제조해서 중국을 침공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터라 일본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었다. 일본이 주원장(朱元璋; 명 태조)의 초상화를 과녁으로 삼았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명나라 영락제는 “만 척의 배를 보내 토벌하겠다”고 위협했다.¹⁰ 뒷날 조선이 적극적으로 쓰시마를 무력 점거한 것도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 해(1419년) 6월 명나라 통수(統帥) 유강(劉江)이 요동반도의 망해과(望海峒)에 상륙하는 왜구를 전멸시킨 것도 조선의 출병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¹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일본은 조선의 쓰시마 정벌 배후에 명나라의 존재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경계한 것이다.

쓰시마 정벌 이후 일본과 조선이 타협한 것은 일본과 조선, 명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을 균형 잡힌 새로운 국제정세의 국면으로 최종적으로 전환시킨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국의 역사 서적에는 거의 서술되

7 조선 태종은 쓰시마 정벌을 통해 왜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다. 전란으로 쌍방의 사상자가 3,800명에 이르자, 쓰시마의 젊은 번주(藩主)는 조선에 대해 강화를 요청했다. 조선은 쓰시마를 경상도 지역으로 편입시키고 쓰시마 주민도 거제도도 이주시켰다.

8 당시에는 ‘몽고 침략’의 기억이 아직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인지 일본은 여전히 중국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조선 『세종실록』 제10권(1420년)에는 사절단 통사 윤인보(尹仁甫)의 ‘복명서’(復命書)가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우리가 막 일본에 도착했을 때 일본사람들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수도로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심수암(深修庵)에 머물렀다. 절의 혜공(惠珙)스님이 우리에게 “명나라가 일본을 토벌하였는데, 당신은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서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스님은 “조선과 명나라는 하나인데 어쩌서 당신은 모르는가. 예전에 명나라 사신이 와서 만약 일본이 승복하지 않으면 명나라와 조선이 함께 너희 나라를 토벌하겠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조선의 사정을 물어 보는 것이다”.

9 오함(吳晗)이 정리한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北京:中華書局, 1962) 제1권, 홍무 20년(1387), 73-74쪽.

10 同上, 제1권, 영락 10년(1413), 255쪽; 영락 14년(1416), 265쪽.

11 같은 해(영락 17년, 1419)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 6월 “요동 총군 도독 유강이 왜군을 모조리 잡아 들였다”. 명나라 군대와 왜구가 망해과에서 전투를 벌여, “113명을 생포하였고 1,000여명을 죽였다”. 『명태종실록(明太宗實錄)』 213권, 2141-2143쪽. 또 엄종간(嚴從簡)의 『수역주자록(殊域周咨錄)』 중의 ‘일본’ 부분 참조.

고 있지 않다.¹²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어째서 중국의 역사 서술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일까? 이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임진왜란·정유재란' 에 대한 각국의 인식

'임진왜란' (1592) 과 그 후의 '정유재란' (1597) 은 앞서 말한 몽고와 일본,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발생한 '몽고 침략' 과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 한·중·일 3국이 모두 전력을 기울여 직접 참여했고 투입한 병력도 막대한 사건이었다. 또한 이 전쟁에 관해서는 3개국 각국의 문헌에 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고, 후대의 각종 국사책에도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¹³

그러나 전쟁에 관한 명칭은 서로 다르다. 한국에서는 이를 '임진왜란·정유재란' 이라 하고, 일본에서는 '분로쿠·게이초노에키' (文祿·慶長の役), 중국에서는 '만력동정·항왜원조' (万曆東征·抗倭援朝) 라고 부른다. 이처럼 명칭을 달리하는 이면에는 서로 다른 명백한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역사 문헌에 남아있는 기술이 상이할 뿐 아니라 현재 각국의 역사서술도 서로 다르다. 중국 역사책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출병에 대해, 팽창적인 야심을 가지고 동아시아에 대제국을 수립하기 위해 '침략' 을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조선과 중국의 역사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일본조차도 '침략' 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전쟁에 관한 묘사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역사문헌을 바탕으로 한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임진왜란' 의 경우에도 서술상 미묘한 차이가 보인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는 '임진왜란' 에 대해 조선의 타협과 일본의 강경한 태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측이 내놓은 강화 조건은 ①명나라 황제의 딸은 천황과 결혼해서 일종의 '화친' 관계를 맺을 것, ②명나라는 일본과 감합무역(勘合貿易)을 행할 것, ③조

12 광말약, 전백찬, 범문란의 저작에 이 사건에 관한 서술은 거의 없다. 거의 모든 중국의 역사서는 이 사건을 무시하고 있다.

13 중국 문헌 가운데 가장 자세한 연구는 李光涛, 『朝鮮 '壬辰倭亂' 研究』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之六十一, 台北, 1972) 이다. 일본 문헌 중 참고 할 만한 것은 石原道博, 『文祿·慶長の役』 (東京: 塙書房, 1963) 이다. 필자는 중국어로 번역된 崔官, 『壬辰倭亂—四百年前的朝鮮戰爭』 (金錦善·魏大海 譯,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3) 을 참고하였는데, 이 책은 주로 임진왜란의 영향, 특히 한일 문화와 문학에 끼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14 전백찬, 『중국사강요(中国史綱要)』 하권, 531-532쪽. 약 1천자 정도의 기록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고 더 나아가 중국을 침략하려고 함, (2) 1593년 일본 최정예의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를 격퇴하고 평양과 개성을 수복하였고 일본군은 부산으로 후퇴함, (3) 명의 석성(石星)은 일본과 평화 교섭을 주도하였으나, 1597년 일본군이 다시 조선을 침입함, (4)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일본군은 조선 남해에서 멸망하고 조선은 전쟁에서 승리함. 결론적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은 실패다. 그 원인으로는 조선 사람들의 불굴의 항전 의지와 명나라 군대의 두 번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다" (532쪽); 광말약, 『중국사고(中国史稿)』 제6권, 572-578쪽. 오함(吳晗)의 『사료(史料)』, 『명사(明史)』, 『명사기사본말(明史紀事本末)』 등과 같은 문헌에 따르면, 그 과정이 더욱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명나라 군대의 첫 번째 파병과 관련하여 전백찬의 저서와 다른 점은 '대치국면 형성'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선의 남부를 일본에 할양할 것 등이었다.¹⁵ 그런데 강화를 서둘렀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당시 이러한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1596년 승자의 기분을 갖게 된 명나라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국왕’에 책봉하고 일본의 조공을 허락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한다. 이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격분해서 두 번째 전쟁(1597-1598)을 일으킨다.¹⁶ 이에 반해 중국측 기록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중국의 통사류 저술에는 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권토중래를 기해 거짓으로 명나라에 강화를 요청하고 명나라의 철병을 틈타 새로운 공격을 준비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명나라도 타협을 함으로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함정에 걸려서 수세로 돌아서고 말았다”¹⁷고 한다.

이와 같이 현재 각국의 역사서적은 (국가의) 자존심 때문에 각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일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역사서의 경우, 중국 원군이 조선을 위기에서 구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명나라 원군(조선도 포함해서)의 일본에 대한 승리도 과장하고 있다.

4. 동아시아사의 관점에 입각한 인식

만일 우리가 국가·왕조의 입장을 초월해서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전체의 시각으로 위의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재검토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① 몽고·원나라의 일본 침략(또는 고려를 속국화한 것)은 동아시아의 정치적 국면에 변화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문화적 측면에서도 각국의 자아의식을 환기시킴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삼는’ 풍조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었다. 정치적으로는 조공 또는 책봉체제가, 문화적으로는 한·당·송 등의 중국을 배우거나 모방하는 풍조가 점차 변화하여 정치적으로 자국중심주의와 문화적으로 독립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② ‘쓰시마 정벌’의 발생과 그 해결은 동아시아 3국 사이에 다시금 균형 잡힌 관계를, 또 그 후의 백 년 내지 수백 년 동안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안정을 가져왔다. 조선의 ‘사대주의’를 축으로 하여 명나라와 조선이 ‘조천’(朝天)을 통해 조공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일본과 조선은 ‘통신’(通信)을 통해 대등한 국가 간 외교를 지속했다. 여기에 육로와 해로 두 방면의 무역도 실시되어, 명·청 시대의 중국, 조선, 일본 사이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오랜 기간 균형이 유지되었다. 서양인이 동양으로 진출하기

15 이 점에 대해서는 역사자료에 따라 차이가 보인다. 예를 들면, 만력 24년(일본의 게이초 원년, 1596) 명나라에서는 정사 양방형(楊邦亨), 부사 심유경(沈惟敬)을 일본 오사카에 파견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면담하게 하였다. 일본 문헌기록에 따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7가지 강화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명나라 기록에는 마치 일본이 화해를 청하고 명나라는 우월한 위치에 있었으며, 부산의 일본 군대를 철수시켜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7가지 강화조건 내용과 크게 달랐다. 위 내용은 『명신종실록(明神宗實錄)』, 宋應昌 『경략복국요편(經略復國要編)』, 諸葛元聲 『양조평양록(兩朝平壤錄)』 등에서 참고할 수 있다.

16 佐藤信外, 『(改訂版) 詳説日本史研究』(山川出版社, 2012), 234쪽 참조.

17 翦伯贊 『中国史纲要』(下), 552쪽.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발발은 당시의 안정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크게 흔들어 놓았고, 훗날 동아시아가 공유하는 아이덴티티의 붕괴라는 상황의 복선을 깔았다. 그러나 당시에 이 사건은 신속하게 수습되었고 동아시아 세계도 역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전에 구축된 국제적 질서를 회복했다. 그러한 국면은 19세기에 서양 열강이 무력을 배경으로 동양에 진출하여 구미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 동양을 편입시킬 때까지 계속되었다.

만약에 역사학자가 오로지 자국의 입장에 집착하고 현대 국가의 국경선에 시야를 한정해서 지역적 연동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역사에는 반드시 '사각'이나 '맹점'이 생기게 된다. 중국의 역사서는 몽원(蒙元)에 의한 일본침략과 고려지배가 단지 몽고인·몽원(蒙元)의 세계지배 야심의 발현에 지나지 않으며, 조선의 쓰시마 침공도 그저 이웃나라 사이의 분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진왜란·정유재란'에 이르러서는 일본이 침략자이고 중국은 조선의 우방이었으며 양국이 손을 잡고 일본 침략군을 무찔렀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하지만 만약 역사학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동아시아사의 시야 속에서 재검토한다면, 새로운 다른 시각이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역사 서술에 만약 하나의 중심(국가)만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중심과 주변이 있어서 중심은 명석한 데 반해 주변은 항상 몽매한 것이 되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동아시아사와 일국사의 차이로부터 알 수가 있다. 만약 역사학자가 초점을 늘 중심에 맞추게 되면 주변은 종종 잊혀지거나 폐기되어 버린다. 그러나 역사 서술에 여러 개의 중심이 있고 여러 개의 역사권을 설정한다면, 이들 역사권이 교착하는 곳에 몇몇 겹치는 부분이 나타난다. 동아시아사는 몇몇 역사권의 교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몇 년 전 필자는 "주변에서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실로 '주변에서 일본을 보고', '주변에서 한국을 보고', '주변에서 몽고를 봐야한다'고 역설해왔다. 지금은 '아시아 속의 중국사'를 써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다. 이들 교착하는 '주변'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확대된 '아시아' 속에서 역사를 되돌아보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그럴 경우 여러 가지 색다른 풍경이 나타나지 않을까? 한 사람의 역사학자로서 역사가 아직 모양새를 갖추지 않은(즉, 저술이라는 형태를 띠지 않은) 현장에서 역사를 상상해야 하며, 또한 국가의 국경선(현대국가의 국경선은 나중에 와서 형성된 것이다)을 초월하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역사를 관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오로지 지금의 국경선에 집착하여 얽히고설킨 과거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기만 한다면, 종종 고정된 또는 고착된 '중심과 주변'이라는 역사구도에 매몰되고 '주변'도 잊혀지고 만다. 지금의 '주변'이 당시의 '중심'이었을지도 모른다. 자국 중심의 역사 서술은 정치·문화적 가치관의 역사적 차이로 말미암아 자칫 역사에 대한 편향된 평가를 내리기 쉬운 것이다.



일본의 국사(연구/교과서) 서술과 동아시아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도쿄대학교 명예교수)

머리말

일본의 역사연구 및 역사교육은 모두 일본사와 외국사의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이 분류는 현재를 살아가는 일본인의 세계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와 일본을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일본은 세계(아시아)의 바깥에 존재한다’고 여기는 세계관이다.

필자는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세계관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최근 일본학술회의 사학위원회에서 고등학교 역사교육 속에 일본사와 세계사를 융합한 ‘역사기초’라는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제언을 참조하여 다음 번 학습지도요령에서 유사한 형태의 ‘역사종합’이라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현행 일본사교육이 일본의 외부세계(外界), 특히 동아시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 주요 교과서를 자료로 삼아 분석하고 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장래의 일본사 연구와 교육의 바람직한 형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1.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술된 세계와 동아시아

일본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일본사와 세계사는 과목으로서 서로 분리되어 있고, 또한 이수자가 반드시 중복되는 것도 아니다. 현행 제도상으로 세계사는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일본사 이수자는 세계사를 이미 배웠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런 것도 아니다. 대학입시에 주력하고 있는 고등학교 중에는 세계사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도 있다. 또한 국립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에게 필수인 ‘대학센터시험’에서는 ‘역사지리’ 세 과목 가운데 일본사 지원 수험생의 숫자가 가장 많고 지리 과목이 두 번째, 세계사 과목이 가장 적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생들 중에는 세계사를 배우지 않았거나 또는 배웠다고 해도 잊어버린 채로 졸업하

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미래 세대가 일본 외부세계의 역사에 무지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실이 바로 '역사종합' 과목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 수험자의 대부분이 배우고 있는 일본사 교과서에서는 세계와 동아시아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과연 일본사는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기술되고 있는 것일까? 아래에서는 세 개의 대표적인 교과서에 입각하여 이를 분석해본다.

(1) 야마카와출판사(山川出版社)의 『상설 일본사(詳説日本史) B』 (2015년)

이 교과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교과서로서 현재 60%를 넘는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장래 일본인의 역사관에 대한 영향력도 클 것으로 생각된다.

통계 결과를 소개하기 전에 일본사 교과서의 시대구분을 간단히 설명해두자. '원시·고대' '중세' '근세' '근대·현대' 라는 4분법이 그것이다. 교과서이기 때문에 문부과학성이 제시하는 '학습지도요령' 을 따르고 있는데,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이 4분법을 사용해 왔다. 이는 서양의 '고대' '현대' '중세' 라는 3분법에 일본의 사정을 고려해서 또 하나의 시대 구분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사의 '근대·현대' 란 서양과의 관계가 긴밀화됨에 따라 시작된 '근대화' 시대다. 물리적 시간상으로는 중국의 '근대' 와 '고대' 라는 2분법의 '근대' 와 동일하다. 한편 일본사의 '고대' 란 이른바 일본의 '고전문명' 이 구축된 시대다. 3세기경 국가의 형성에서 출발하여 8세기 율령국가의 확립을 정점으로 하는 시대다. 중국에서는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에서 당나라까지,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한다.

이 '근대' 와 '고대' 사이에 '중세' 와 '근세' 라는 두 시기가 들어 있다. 이 두 시기를 17세기 초반 도쿠가와 정권의 확립을 기점으로 하여 구분하는 것은 학계에 공유되어 있는 인식이다. '중세' 후기 전란의 시대가 끝나 다시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후 200년 이상 평화가 지속되는 '근세' 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 교과서도 그러한 틀에서 기술되고 있다. 단지 학계에서는 '중세' 와 '근세' 를 각각 다른 시대와 연관시키는 경우, 이러한 시기구분이 반드시 확고한 것은 아니다. '근세' 말기에는 두 시기를 무가(武家) 지배의 시대로 연속적으로 파악하기도 하는데 이는 서양의 '봉건제' 개념이 도입되었을 때에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이에 대해 1960년대부터는 미국인 학자의 영향으로 '근세' 를 '중세' 와 분리하여 '근대' 의 전제가 만들어진 시대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서양과의 접촉 이전에 경제 발전의 눈부신 성과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에 이르러서는 이미 '근대화' 의 맹아가 형성되고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어 인기를 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후에 한국과 중국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일본의 교과서는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역사해석에 깊이 경도되지 않고, 특정 입장을 초월해서 공유하고 있는 4분법에 입각하여 사실을 기술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상설 일본사(詳説日本史) B』 는 일본의 외부세계의 모습이나 일본

과의 관계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을까? 부록의 <표 1> 과 <표 2> 는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기술한 행의 대강의 분량을 숫자로 기입한 것이다. 시대구분은 이 교과서의 장별 구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외부세계의 구성은 세계 전체, 동아시아 (인도를 포함), 서양을 비롯한 동아시아 외부 세계의 세 지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그 기술된 분량을 비교해보았다.

표 1 야마카와 (山川) 지역별 기술 행수 (行數) *도표도 행으로 환산. 칼럼이나 주석도 행 단위로 계산함.

열 1	세계전체	동아시아·인도	동아시아 외부 (서양 포함)	총계 (A)	페이지수 (B)
서문·특별 항목	5	9.5	0	14.5	4
제 I 부 원시·고대	22	300	0	322	79
제 II 부 중세	27	207	4	238	70
제 III 부 근세	18	271	359	648	94
제 IV 부 근대·현대	390	669	808	1867	167
총계	462	1456.5	1171	3089.5	414

표 2 야마카와 (山川) 한 페이지 당 기술 행수 (A/B)

열 1	세계전체	동아시아·인도	동아시아 외부 (서양 포함)	총계 (A)
서문·특별 항목 개황	3.6	2.4	0.0	3.6
제 I 부 원시·고대	4.1	3.8	0.0	4.1
제 II 부 중세	2.8	3.0	0.1	3.4
제 III 부 근세	6.0	2.9	3.8	6.9
제 IV 부 근대·현대	2.3	4.0	4.8	10.9
총계	7.0	3.5	2.8	7.5

이 교과서에서 일본의 외부세계에 관한 기술은 한 페이지당 평균 7.5 행에 이른다. 한 페이지당 행수가 약 29 행이기 때문에, 약 4분의 1 을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기술에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 의외로 일본의 외부세계에 관한 기술은 많은 편이다.

시대별로 한 페이지당 기술 분량을 개관하면, 외부세계에 대한 기술은 ‘근대·현대’ 와 ‘원시·고대’ 가 많고 중세는 적다. 또한 의외로 ‘쇄국’ 의 시대로 간주되어 온 ‘근세’ 를 상당히 자세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어서 바로 설명한다.

시대별로 어떤 주제와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지를 소개하면, 먼저 ‘원시·고대’ 부분에서는 동아시아 전반 및 인도와의 관계가 대 (對) 중국 관계와 함께 중시되고 있다. 원시시대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견지에 바탕을 둔 유라시아 동단 (東端) 과의 연속성과 그로부터의 괴리 문제가, 국가형성기와 관련해서는 중국 사서 (史書) 의 사료로서의 원용이나 중국·조선을 통한 불교의 전래, 나아가 중국에 파견한 사절단에 의한 율령 및 기타 제도·문물의 도입 등이 주된 테마다.

일본의 ‘중세’ 는 12세기에 무가정권이 성립되어 교토의 고대정권과 병존하다 마침내 지방에 무가 (武家) 가 활거하게 된 시대다. 중국에서는 송나라에서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에 걸친 시대, 한반도에서는 고려에서 조선 초기에 해당

하는 시기다. 이 시대에 관해서는 외부세계에 관한 기술은 비교적 적고 송나라와의 무역과 선(禪)문화의 수입, 몽고 침략 및 이른바 '왜구' 등이 주된 테마다. 왜구에 관해서는 왜구의 후기 구성원의 주체가 일본인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시대에는 후에 '일본'에 편입되는 주변부, 즉 류큐(琉球) 왕국의 형성이나 에조치(蝦夷地)·가라후토(樺太) 민족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기술되어 있다.

일본역사상 '근세'는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라는 3인의 패자에 의해 구축되었다는 것이 정설이고 교과서도 이를 답습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일반적으로 '쇄국' 시대로 간주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는 외부세계의 기술에 한 페이지당 평균 7행이나 할애하고 있다. 게다가 참조하고 있는 지역도 동아시아보다 동

표 3 야마카와(山川) 시대별·지역별 기술 행수

	전세계	동아시아·인도	조선	중국	타이완	동남아시아	류큐(琉球)
서문	5						
특별 항목 (대불건립(大仏造立))		6	3.5				
제 I 부 원시·고대	22						
1 장 일본문화의 여명		92	3	27			
2 장 율령국가의 형성		68	22	88			
3 장 귀족정치와 국풍문화							
소계	22	160	25	115	0	0	0
제 II 부 중세	27						
4 장 중세사회의 형성		23		18			7
5 장 무가사회의 성장		30	20	76			7
소계	27	53	20	94	0	0	14
제 III 부 근세	18	4					
6 장 막번체제의 성립		40	76	15		14	12
7 장 막번체제의 전개		9	8	39	2		
8 장 막번체제의 동요				40			
소계	18	53	84	94	2	14	12
제 IV 부 근대·현대	28						
9 장 근대국가의 성립		24	106	109	11		15
10 장 2 차의 세계대전과 아시아	178		26	207		34	
11 장 점령하의 일본	93		20	4		12	
12 장 고도성장의 시대	38	4	12	3		5	14
13 장 격동하는 세계와 일본	36	14		15		9	
소계	373	42	164	338	11	60	29
총계	445	314	296.5	641	13	74	55

아시아 외부가 더 많다. 그 원인은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근세를 다룬 세계의 장 가운데 처음과 마지막 장에 서양과의 관계가 상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16-17세기를 다룬 장에서는 크리스찬(christian)에 대한 기술이 많고, 19세기 전반을 다룬 장에서는 서양에 대한 해안 방어와 양학(洋學)의 보급 사실에 다수의 행을 할애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 가운데인 18세기 장에서는 외부세계에 관한 기술이 적다. 외교관계가 있었던 조선과 한학에 관한 언급을 제외하면, 여기서는 전통적 ‘쇄국’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에조지 (蝦夷地) · 사할린 (樺太)	동아시아 소계	중동	유럽	러시아	미국	기타	동아시아 외부 소계	세계 총계
		0						0	5
		9.5						0	9.5
		0						0	22
		122						0	122
		178						0	178
		0						0	0
	0	300	0	0	0	0	0	0	322
		0						0	27
	9	57						0	57
	17	150		4				4	154
	26	207	0	4	0	0	0	4	238
		4						0	22
	12	169		201				201	370
		58						0	58
		40		118	40			158	198
	12	271	0	319	40	0	0	359	648
		0						0	28
	10	275		253	52	57		362	637
		267		89	33	113		235	680
		36				101		101	230
		38			7	38		45	121
		38	35		18	12		65	139
	10	654	35	342	110	321	0	808	1835
	48	1441.5	35	665	150	321	0	1171	3057.5

한편 '근대·현대'에서는 19세기 중반 서양에 대한 개국과 메이지 유신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명칭상으로는 '근대'와 '현대'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지만, 5개의 장을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이는 '근대'와 '현대'의 구분이 시대에 따라 변하므로 그 구분에 정설이 없다고 집필자들이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학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러시아 혁명을 경계로, 그 다음에는 대일본제국 붕괴를 경계로 삼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1960년대의 고도성장기, 나아가 냉전의 종언을 기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근대·현대' 시기에서 일본의 외부세계에 대한 기술은 평균 11행으로 한 페이지의 38퍼센트나 할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세계 전체·동아시아·동아시아 이외의 지역 가운데서는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이 가장 많다. 흥미로운 사실은 각 장마다 이러한 비중이 다르다는 것이다. <표 3>을 보면 '근대국가의 성립' 장에서는 세계 전체에 대한 기술은 없고 동아시아 외부에 대한 기술이 동아시아 지역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근대가 미국의 개국 요구에서 시작되었고 메이지 유신의 개혁이 주로 서구화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이외 지역'에서는 유럽에 대한 기술이 미국과 러시아를 능가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다른 한편, 개별 국가에 대한 언급은 조선과 중국의 경우가 가장 많다. 중국에 대한 언급은 동아시아의 국제환경을 설명할 때에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 간 관계로는 조선과의 관계에 대한 기술이 가장 많다. 이는 조선과의 국교 회복에서 병합에 이르기까지, 조선과의 관계가 일본 외교의 가장 긴요한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다음 장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동아시아'라는 표제가 붙어 있다. 제목처럼 동아시아와의 관계 기술이 동아시아 외부에 대한 기술의 1.4배에 이른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의 관계 기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중일전쟁에 이르는 과정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장과 비교할 때 세계 전체에 대한 기술이 급증한 점이 주목을 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이유 강화회의를 시작으로 일본이 세계적 규모의 조약기구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일본이 '열강'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과서가 대국화에 자부심을 부추기는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 외부에 대한 기술에서는 유럽을 제치고 미국이 수위로 올라섰다. 이는 태평양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정치의 주역이 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점령하의 일본'에서는 미국에 대한 기술이 다른 지역을 압도한다. 또한 일본에서 독립한 한국·조선이나 중국에 관한 언급은 적다. 미국의 점령하에서 양국과의 외교가 존재하지 않았고 한국전쟁에 의한 전쟁특수를 제외하면 경제관계도 빈약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고도성장 시대'인데, 여기서도 한국·중국과의 국교회복에 관한 기술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그 밖에 흥미로운 사실은 '세계 전체'에 대한 기술 외에 유럽이 등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격동하는 세계와 일본'은 다른 장과 달리 관계에 대한 기술보다 지역별 현황 설명이 많다.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많고 중동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상으로 세계 가운데서 어느 지역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개관해보았다. 동아

시아 지역에 대한 기술에 한정해서 다시 정리하자면, 원시·고대 및 중세에서는 당연하게도 동아시아 지역이 거의 전부이지만, 근세 이후로는 동아시아 외부가 등장하며 그것도 동아시아에 대한 기술보다 더 많다고 하는 의외의 특징이 나타난다. 동아시아의 내부로 눈을 돌려보면, 원시·고대에서는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 및 중국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에 비하면 조선에 관한 언급은 동아시아 전체를 개관하는 설명 가운데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대 전체를 보면 의외로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분야에 착안하여 외부세계를 기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표 4-a>·<표 4-b>를 보면 원시·고대에서는 문화이전(文化移轉)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문물·제도 전부를 중국·인도·조선에서 수입한 사실에 의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고대 초기의 왕권은 한반도를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를 갖지 못한 사회였다. 따라서 고고학적 조사 외에도 중국왕조의 정사(正史)가 사료로서 원용된 점이 특징적이다. 중세의 경우에는 무역이 국가의 외교와는 별개로 진행된 것에 대한 언급이 많아진다. 전쟁을 포함한 외교에 대한 기술은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편이며, 특히 근대·현대 부분에서는 약 4분의 3에 이르고 있다. ‘쇄국’의 시대로 간주되어 온 근세에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이다. 전쟁 항목을 따로 떼내어 보면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그 대부분은 중세의 몽고 침략과 근대·현대의 전쟁이며, 원시·고대와 근세의 경우는 아주 적다. 일본사가 시대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이와 같은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표 4-a 야마카와(山川) 분야별 기술 행수

열 1	사료	문화이전	교역	외교·전쟁	전쟁 (내수)	총계
제 I 부 원시·고대	60	211	18	51	14	340
제 II 부 중세	4	37	58	79	40	178
제 III 부 근세		192	78	308	24	578
제 IV 부 근대·현대		218	305	1417	503	1940
총계	64	667.5	459	1855	581	3036

표 4-b 야마카와(山川) 분야별 기술 행수 (%)

열 1	사료	문화이전	교역	외교·전쟁	전쟁 (내수)	전체
제 I 부 원시·고대	18%	62%	5%	15%	4%	100%
제 II 부 중세	2%	21%	33%	44%	22%	100%
제 III 부 근세	0%	33%	13%	53%	4%	100%
제 IV 부 근대·현대	0%	11%	16%	73%	26%	100%
총계	2%	22%	15%	61%	19%	100%

(2) 기타 역사교과서 : 도쿄서적(東京書籍) 과 시미즈서원(清水書院)

이어서 다른 교과서도 비교를 위해 일별한다. 하나는 시장에서 두 번째로 점유율이 높은 도쿄서적의 『신선 일본사(新選日本史) B』(2014년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미즈서원의 『고교 일본사 B』(2016년판)이다.

이 두 책의 장별 구성은 앞에서 본 야마카와출판사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것이든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세부적

인 항목 구성은 다르다. 주목할 점은 야마카와출판사에서는 하나로 묶여 있는 ‘근대’와 ‘현대’를 1945년을 경계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야마카와 판에서도 제국시대와 제국 붕괴 후의 시대는 확실히 구별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전전’과 ‘전후’라는 시대구분이 중시되어 왔고 그것이 교과서에도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2016년의 시점에서는 ‘전전’도 ‘전후’도 약 70여년 남짓한 거의 동일한 기간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세 종류의 교과서에서 외부세계와 동아시아를 다루는 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래에서는 야마카와 판에서 의외의 결과를 도출한 ‘근세’를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표 5-a> · <표 5-b> · <표 5-c>를 대조해보면, 우선 근세 전체를 두고 볼 때, 도쿄서적의 외부세계에 대한 언급이 야마카와 판의 경우보다 적고, 반대로 시미즈 판의 경우에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이) 적다고 하는 도쿄서적의 경우에도 한 페이지당 6행이 넘는다는 사실에서, 야마카와 판에서 발견되는 의외의 경향은 다른 교과서에서도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a 야마카와(山川) 근세의 지역별 비중

열 1	전세계	동아시아	동아시아 외부	세계 총계
제Ⅲ부 근세	82%	18%	0%	100%
6장 막번체제의 성립	0%	46%	54%	100%
7장 막번체제의 전개	0%	100%	0%	100%
8장 막번체제의 동요	0%	20%	80%	100%
소계	3%	42%	55%	100%

표 5-b 도쿄서적 근세의 지역별 비중

제 3 장 근세사회의 형성과 서민문화의 전개	전세계	동아시아	동아시아 외부	세계 총계
1 장 유럽문화와의 접촉과 국내통일	27%	26%	47%	100%
2 장 막번체제의 성립	0%	41%	59%	100%
3 장 근세사회의 발달과 초닌(町人) 문화	16%	84%	0%	100%
4 장 막번체제의 동요와 서민문화의 발달	0%	8%	92%	100%
소계	11%	36%	53%	100%

표 5- c 시미즈(清水)서원 근세의 지역별 비중

제 3 편 근세	전세계	동아시아	동아시아 외부	세계 총계
1 장 중세에서 근대사회로	11%	55%	34%	100%
2 장 막번체제의 성립과 국제관계	0%	71%	29%	100%
3 장 막번체제의 전개와 겐로쿠(元禄) 문화	16%	84%	0%	100%
4 장 막번체제의 동요와 화정(化政) 문화	6%	15%	78%	100%
소계	6%	62%	32%	100%

이에 대해 지역 균형의 차원에서 보자면, 야마카와 판과 도쿄서적 판의 경우, 동아시아 외부에 관한 기술이 동아시아 내부를 상회하는 데 비해, 시미즈 판에서는 반대로 동아시아 외부보다 내부에 대한 기술이 훨씬 많다. <표 6>에 정리된 페이지당 기술 행수를 보더라도 비슷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지도요령 하에서도 교과서에 따라 상당히 다른 역사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6-a 야마카와(山川) 근세의 한 페이지당 지역별 행수

열 1	전세계	동아시아	동아시아 외부	세계 총계
제3부 근세	18.0	4.0	0.0	22.0
6장 막번체제의 성립	0.0	3.9	4.7	8.6
7장 막번체제의 전개	0.0	3.9	0.0	3.9
8장 막번체제의 동요	0.0	1.0	3.8	4.7
소계	0.2	2.7	3.6	6.4

표 6- b 도쿄서적 근세의 한 페이지 당 지역별 행수

제 3 장 근세사회의 형성과 서민문화의 전개	전세계	동아시아	동아시아 외부	세계 총계
1 장 유럽문화와의 접촉과 국내통일	4.6	4.4	8.0	17.0
2 장 막번체제의 성립	0.0	3.4	4.9	8.3
3 장 근세사회의 발달과 초닌 (町人) 문화	0.3	1.6	0.0	1.9
4 장 막번체제의 동요와 서민문화의 발달	0.0	0.5	5.2	5.7
소계	0.7	2.2	3.2	6.1

표 6-c 시미즈(清水)서원 근세의 한 페이지 당 지역별 행수

제 3 편 근세	전세계	동아시아	동아시아 외부	세계 총계
1 장 중세에서 근대사회로	2.1	10.3	6.3	18.6
2 장 막번체제의 성립과 국제관계	0.0	11.9	4.8	16.7
3 장 막번체제의 전개와 겐로쿠 (元禄) 문화	0.2	1.2	0.0	1.5
4 장 막번체제의 동요와 화정 (化政) 문화	0.4	1.1	5.4	6.9
소계	0.5	5.1	2.6	8.2

그 이유는 아마도 저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미즈 판의 근세는 주로 중세 말기에서 근세 초기의 국제관계사 전문가인 아라노 야스노리 (荒野泰典) 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아라노는 1980년대부터 이 분야의 해석 변경에 힘을 기울여 온 가장 유력한 연구자다. ‘전후’ 에 일본의 근세 초기 국제관계연구가 오로지 크리스찬을 비롯한 서양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서양에 대한 ‘쇄국’ 을 강조해온 데 반해, 아라노는 오히려 근린 국가인 조선·중국·류큐·에조치·동남아시아 등과의 관계에 눈을 돌려 크리스찬 추방 후에도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유지된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쇄국’ 대신에 ‘해금 (海禁)’ 이라는 한자어를 동아시아 공통의 국제관계 문법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맨 마지막 문제는 어찌됐든 간에, 현재 일본 학계는 아라노와 그의 공동연구자가 제창한 근세 일본의 ‘네 개의 창구’ 라는 해석을 통설로 승인하게 되었다.

시미즈 판은 아라노의 해석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필자는 이 근세 초기 동아시아와 동아시아 외부와의 균형은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야마카와출판사와 도쿄서적의 근세 초기에 대한 취급은 ‘전후’ 미국의 점령기에 형성된, 서양의 압도적 존재라고 하는 이미지에 이끌린 결과로 보이며, 오늘날 학계의 상식에서 볼 때 시대착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미즈 판의 국제관계 기술은 국내에 관한 기술과의 균형 면에서 볼 때 다소 지나친 것일지도 모른다. 한편, 근세 중기와 후기에 주목하게 되면 3사의 경향은 거의 비슷하다. 중기에 오면, 외부세계에 대한 기술이 적어지고 유럽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어진다. 한학의 보급만이 예외다. 이러한 기술방식이 역사의 실재를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학계의 최신 연구에서는 한학의 보급이 훗날의 메이지 유신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언젠가는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18세기말 이후에 대해서는 서양에 대한 기술이 늘고 동아

시아 부분이 줄어들어 3사의 공통된 경향이다. 이 또한 메이지 유신과의 관련, 특히 유신 후에 급격한 서구화가 진행된 사실을 고려하면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현재로서는 '근세' 이외의 부분에 관해서는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없지만, 통독해 본 인상으로는, 3사의 교과서는 근세와 유사한 경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적이 주로 국내에 관심을 기울이는 데 비해, 시미즈서원은 특별항목으로 동아시아·홋카이도·만주 이민·오키나와 등의 '지역사'를 '여성의 사회사'와 나란히 실고 있으며, 야마카와 판 이상으로 외부세계 및 외부세계와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일본사의 연구 동향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주로 대학의 교원들에 의해 집필된다. 중등 교과서에 아카데미즘(학계)의 구성원이 관여하지 않는 중국이나 중등교육기관의 교원이 깊이 관여하는 한국과는 상당히 다르다. 또한 교과서 집필자와 정부와의 관계도 양국과는 다르다. 학습지도요령이라는 큰 틀은 지켜야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시미즈 판에서 본 것처럼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된다.

이는 교과서의 내용이 학계의 연구동향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뜻한다. 국사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기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야마카와 교과서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일본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열도 내의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더듬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다양한 지역과 교류하는 가운데 그 영향을 받으며 전개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일본사를 배울 때, 어느 시대에 대해서도 주변국들을 비롯한 각 지역의 역사나 일본과 여러 외국과의 관계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일본사를 세계, 특히 근린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하는 것은 최근 수십 년 동안의 일본사학계의 흐름이었다. 단, 고대사의 경우 이러한 경향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다. 율령의 도입이 고대국가의 골격을 형성하고 또한 당나라의 율령이 일본 율령의 주석서에서 복원되었다고 하는 사실에서 이는 명백하다. 그러나 중세와 근세에 대해 이러한 해석을 시작한 것은 필자와 동세대 학자로서 앞에서 말한 아라이 야스노리와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 등이었다. 무라이는 중세 후기 전공자로서 이른바 '왜구'가 일본·조선·명나라 등에 걸친 해민(海民) 집단이었음을 밝히고, 당시 동아시아에는 근대와 같은 국가본위와는 별개의 질서원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제시했다. 또한 19세기 중반 일본사 전공자인 필자는 근세에서 19세기말 동아시아 전체를 다룬 대학 수준의 교과서 『어른을 위한 근현대사 19세기편(大人のための近現代史 19世紀篇)』(도쿄대학출판회, 2009년)을 집필했다.

일본·조선·청나라·류큐의 전통사회가 러시아·영국·미국의 등장과 함께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또한 그 상호관계의 추이가 어떠한지에 대해 쓴 책인데, 종래의 근대사에서 국제관계에 관한 기술이 일본 내부의 관점으로만 쓰여진 데 비해, 조선과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관점도 동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새로운 점이다.

이처럼 과거 수십 년 동안 일본사학계에서는 이른바 ‘동아시아의 발견’이라고 할 만한 흐름이 형성되었고 그것은 종래의 ‘고립된 일본’의 이미지를 지워나갔다. 그러한 점이 고등학교 레벨의 일본사 교과서에도 반영된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방면의 연구가 충분한가 하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특히 근대에 관해서는 제국시대의 일본령·식민지, 오키나와와 홋카이도를 비롯한 경계영역 및 이들 경계를 오간 사람들에 대한 실증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며, 필자의 다음 세대가 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예컨대 시오데 히로유키의 『월경자의 정치사: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일본인 이민과 식민』(塩出浩之, 『越境者の政治史: アジア太平洋地域における日本人の移民と植民』, 나고야대학출판회, 2015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되면 언젠가는 보다 넓은 시야에 입각한 일본통사도 가능해질 것이다.

맺음말

현재 일본사 연구와 교육은 일본과 외부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기로에 서 있다. 학계에서의 중세와 근세 연구는 근대사 연구와는 달리 유행이 식어가는 듯하다. 한편 최근 이웃나라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동아시아 내부에서 일본의 위상을 정립한다고 하는 연구 동향에 찬물을 끼얹었다. 젊은 세대가 ‘내향적’이 되어 일본 국내나 서양과의 관계에만 관심을 갖게끔 퇴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고등학교 신설과목인 ‘역사종합’이 성공할지 여부가 중요하다. 문부과학성은 다음 세대가 글로벌화의 와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근·현대에 집중하여 일본사와 세계사의 융합이라는 목표를 세워 이 과목을 설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학계나 교육계가 협력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글로벌화라고 해도 동아시아와 구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지도 분명하지 않다. 내외로부터 밀려드는 정치적 압력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토론 1

국민국가와 근대 동아시아

야오 케이스케 (八百啓介, 기타큐슈시립대학교 교수)



SGRA 52 REPORT

머리말

기타큐슈시립대학교 문학부 야오 케이스케라고 합니다. 이번에 펑(彭) 선생님께서로부터 권유를 받아 이런 소중한 자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전공은 꼭 동아시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21세기 동아시아 젊은이들의 미래를 우리들이 막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현장에서 중국 및 한국과의 교류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특히 수년 간 한국 인천의 박물관과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국민국가 이전의 동아시아

오늘 류 지에 선생님의 문제제기와 특히 거 자오광 선생님, 조광 선생님, 미타니 선생님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근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해, 중국, 일본, 한국에서 서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슬라이드 1). 중국의 경우는 아편전쟁, 일본의 경우는 아편전쟁만이 아니라 페리의 내항이라는 충격이 있어서, 앞서 미타니 선생님이 교과서 사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찌 됐든 근대에 대해 서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조광 선생님의 발표에서 볼 때 한국은 사정이 약간 다르다는 점, 즉 아편전쟁이나 페리 내항을 직접 체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삼국의 차이, 특히 일본·중국과 한국과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광 선생님의 발표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본의 교과서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좀 더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

논점의 정리 · · · 한 · 중 · 일의 차이점

- 문제제기(류 지에 : 기초강연)
- 국경을 넘는 '지(知)의 공동체'
 -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는 쓸 수 있을까? 가능성의 검증
- 거 자오광 발표
- 서양인이 동양에 진출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지속되고 있었다. 19세기 서양 제국이 무력을 배경으로 진출하게 됨으로써 동아시아에는 서구가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가 형성되었다.
- 조광 발표
- 동아시아라는 관점(1990년대부터)이 희박함 · · · 다른 시기보다 근현대사의 경우, 중국사, 일본사와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이해 가능하게 된다.
- 미타니 히로시 발표
- 일본교과서에서의 외부세계 · · · 18세기말 이후 서양에 대한 기술이 증가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기술이 감소하는 유신 후에 급속한 서양화가 진행된 사실에서 볼 때 타당.
- ↓
- 근대 동아시아는 서구와의 관계가 우선하는 질서였다는 사고(거 자오광, 미타니 히로시)
 - 근대사에서 동아시아의 관점을 중시하는 사고(조광)

저는 일본의 근세, 특히 에도시대 대외관계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근세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근대가 되어 정말로 좋아진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근대는 국민국가(nation state)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국민국가는 국민의 일체감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지만, 국민국가의 형성 그 자체가 그 외부에 적을 만든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슬라이드 2).

더욱이 동아시아의 국민국가를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일본에 대해, 중국 및 한국과의 사이에 커다란 출발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본은 페리 내항, 메이지 유신에서 근대가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교과서에서는 당연히 그 점을 중시합니다. 그에 반해,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은 항일운동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일본인은 '항일' 과 '반일' 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를 잘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중국, 한국의 국가는 항일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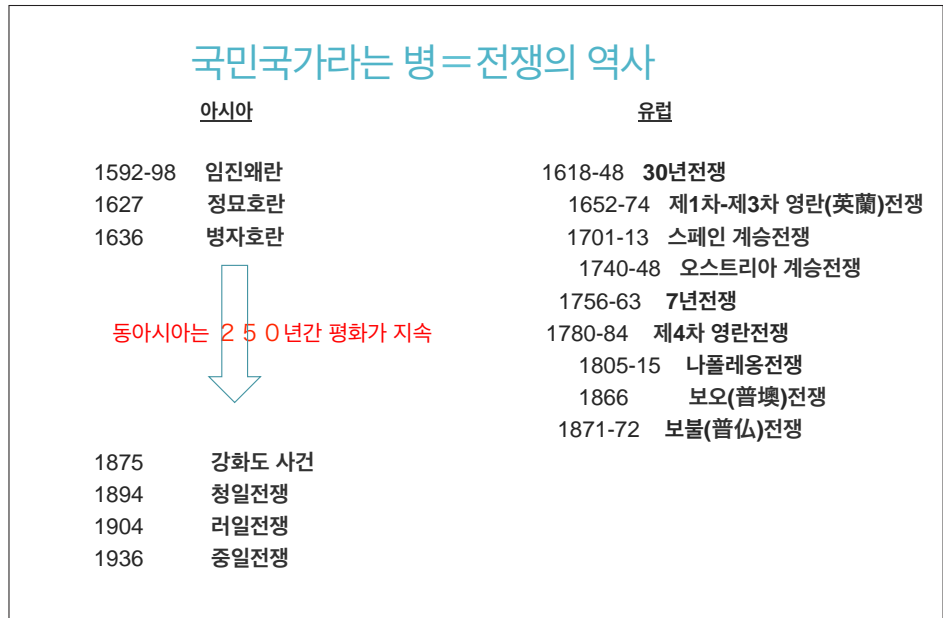
슬라이드 2

국민국가와 근대 동아시아

- 국민국가 (Nation State)
- 안과 '밖'이라는 의식, '상상의 공동체' (Benedict Anderson)
 - 공 · · · 국민의 일체감
 - 죄 · · · '밖'이 되는 적의 창출, 영토의 확정→전쟁
-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 · · 출발점의 낙차 중시 ⇔ 동일시하는 '유교적 근대'
- 일본=메이지 유신, 페리 내항에서 시작. 교과서는 서구 중시. 조약 개정→러일전쟁
 - 아시아의 관점이 중요. 강화도 사건→한국 병합→중일전쟁
 - 중국·한국=항일운동에서 출발. '항일'은 '반일'이 아니다.
- ※ 유럽 학자에게 '각국사'의 집필은 근대국가 형성과정에서 각국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한 것과 관계가 있다. 각국사의 편찬은 식민지시대의 '국가'를 긍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葛兆光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の潮流の中で各国史にまだ意義があるのか」 羽田正編 『グローバルヒストリーと東アジア史』 2016)

그런데, 이 국민국가라는 것이 진정 어디까지 유효한 것일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앞서 거 자오광 선생님의 말씀에도 미타니 선생님 말씀에도 있었습시다만, 실은 에도시대는 매우 평화적인 시대였습니다. 근대 이후 일본에서는 에도시대라고 하면, 쇠국으로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한 정체(停滯)의 시대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도시대의 유럽은 전쟁이 지속된 시대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국민국가를 형성하기 위해 매일같이 전쟁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국민국가라는 것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매우 평화적인 시대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슬라이드3). 우선 이 측면을 이번 포럼에서 공유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측면을 보다 더 많은 일반인들과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점은 결코 정체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영지(英知), 즉 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구자로서 이 지혜를 다시 재학습하고 재탐구하여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슬라이드 3



2. 동아시아로부터의 재검토

저는 에도시대 대외관계, 특히 네덜란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도 네덜란드사가 존재합니다만, 16세기부터 시작되는 역사입니다(슬라이드4). 네덜란드라는 근대국가가 등장하는 것이 16세기입니다. 그 이전의 시대, 즉 고대사·중세사에 해당되는 것이 일본에서 말하는 동아시아사에 비견될 만한 것인데, 거기서는 유럽 전반의 지역사를 학습합니다. 일본사에서도 고대·중세는 특히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서술됩니다만, 근세사부터 일국사의 관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다 명확하게 동아시아의 관점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 4

전근대 동아시아=국민국가 이전의 동아시아

네덜란드사 · · · 고대사 · 중세사 · '네덜란드사'(16세기 이후)

일본사 · · · 고대 · 중세는 동아시아사의 관점을 중시하고 있지만, 근세사('쇄국')부터 일국사의 관점으로 바뀌었고, 근대사는 페리 내항, 조약 개정, 러일전쟁, 군축회의, 진주만 공격, 포츠담 선언 등 서구와의 관계가 중심이 되었다.



- 아시아의 관점에서 일본사, 특히 근대사의 접근 틀을 재검토할 필요
- 탈(脫)국민국가사관으로 전근대사를 재검토할 필요 · · · 아미노 요시히코(網野善彦)etc.
- 환(環)중국해 세계 = '왜인'의 사회 · · · 무라이 쇼스케(村井章介)etc.
- 중화사상, 책봉체제 = '영토' '영해'의 개념은 없었다.

(1) 국풍(國風) 문화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류 지에 선생님이 기조강연에서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꺼지기 시작한 불을 어떻게든 되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라는 관점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장점을 보다 많은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동아시아의 무엇을 거론하면 무엇을 알게 되는가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동아시아라는 인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풍문화라는 것이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종래에는 견당사(遣唐使)가 폐지되어 중국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바람에 독자의 문화가 생겨났다고 설명해왔습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슬라이드5). 물론 견당사라는 정치적 관계, 외교관계는 끊어집니다만, 중국으로부터 다수의 무역선이 몰려와서 무역이 발전합니다. 이는 송나라 화폐의 경제권이 점차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시

슬라이드 5

동아시아로부터의 재검토① · · · '국풍문화'란 무엇인가?

《종래의 설》

견당사 폐지(정치적 사건)에 의해 당의 영향을 벗어나 일본화

《최근의 연구》

중국문화의 소화 · 흡수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의 풍토에 알맞은(일본풍) 문화

《실태》

9세기의 대외관계

907년 당 멸망

하카타(博多)에 중국(唐人) 상선 · 신라 상인이 내항하게 되다 · · · 송 화폐 경제권의 형성

838년 최후의 견당사



894년 스가와라 미치자네(菅原道真)의 제언

국풍(国風)문화

모토 (橋本) 선생님의 전공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본과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어 견당사가 불필요해졌고, 그런 바탕 위에서 국풍문화가 꽃을 피우게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경제라는 관점에서 조명함에 따라 국풍문화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일본사, 동아시아 역사의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 임진왜란의 의미

예를 들면, 조광 선생님의 말씀 중에 있었던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입니다만, 당시 히데요시는 조선에서 일본 군대가 난폭한 짓만 하지 않으면 조선의 민중이 자기들을 지지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외침략을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그에게는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타니 선생님이 일본의 국민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본의 국가 본질 (nature of nation)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민국가로서는 메이지 유신, 페리 내항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실은 야마토 정권의 정복사업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6). 그런 만큼 오늘날 일본의 국가 시스템은 국민국가로서 페리 내항 시부터 생겨난 미국 중시의 성질과, 고대 야마토 정권 이래 주변 이민족을 정복하여 동화시켜 온 프로세스라는 두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히데요시의 임진왜란, 조선침략전쟁이 매우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그런 침략의식의 결여가 근대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사진은 무거운 등짐을 진 조선사람들의 사진입니다만, 러일전쟁은 어떤 전쟁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시마 료타로 (司馬遼太郎)가 묘사하는 러일전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요컨대, 조선 민중의 부담을 바탕으로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했다는 또 다른 진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6

동아시아로부터의 재검토② · · · 임진왜란의 의미

1. 고대 야마토 왕권 이래의 '정복'에 의한 국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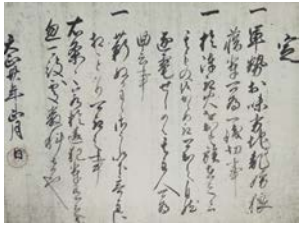

- '침략' 의식의 결여
- '가도입명'(假道入明)
- 《근대로 이어지다》
- 청일 · 러일전쟁에서의 조선 민중의 부담
- '사변'으로서의 대륙에서의 전쟁

2. 주변영역에서의 권력과 민중의 관계성

- 큐슈 농촌으로부터 징발과 조선 포로에 대한 농업노동 전가
- 반(反)도요토미 영주층의 '항왜(降倭)'
- 동아시아에서 의병운동의 의미

↓

전근대의 전쟁과 근대의 전쟁과의 공통점·차이점

또 한 가지, 임진왜란에서는 규슈의 농민이 짐들을 운송하기 위해 한반도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규슈의 농촌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그 때문에 조선 사람들을 납치해와서 그 사람들을 농촌 일꾼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태평양전쟁 기간에 행해진 징용공 및 위안부 등의 근대 문제에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임진왜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항왜 (降倭) 라고 불리는, 조선측으로 넘어간 일본의 무사들은 반 (反) 도요토미 영주층이라는 성격을 갖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컨대, 이런 전근대의 전쟁을 오늘날의 근대 국민국가의 전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 것은 앞서 조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고구려 혹은 조선통신사 문제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도시대의 외교관계를, 예를 들면 조선통신사 및 독도 (다케시마)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일본과 조선, 혹은 막부와 조선이라는 국가간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조선통신사의 경우는 막부와 쓰시마번과 조선이라는 삼자 관계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막부는 조선통신사의 필요성을 그렇게 절실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니다. 조선통신사를 가장 필요로 한 곳은 쓰시마번이었습니다. 따라서 전근대의 역사를 오늘날의 국민국가의 관점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역으로 국민국가라는 것이 우리들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가에 대해 되묻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새로이 우리들 세 나라 각각의 역사를 해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른 말투로 발표해서 실례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과 같이 제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2



역사인식과 개별 실증의 관계 : ‘번국접소도’(蕃国接詔函)를 사례로

하시모토 유 (橋本 雄, 홋카이도대학교 준교수)

머리말

홋카이도대학교의 하시모토 유(橋本雄)라고 합니다. 이런 큰 배움의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즈미재단과 기타큐슈시립대학교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국사들의 대화’ 라는 것입니다만, 대화를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구체적인 과제가 되리라는 것을 오늘 발표를 듣고 알았습니다. 앞의 세 분 선생님의 발표는 자민족중심주의와 국가주의를 상대화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국사’ 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국사라는 것은 서술, 역사인식, 역사관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실증적인 사실이나 현상이라는 연대기적인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칼로 자르듯이 분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역사인식이 있고 그 관점에 입각해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개별적 사실을 밝혀 낼 수도 있고, 개별 사실로부터 역사인식을 바꾸거나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인식과 개별 사실의 실증은 사이클처럼 서로 순환하고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역사인식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 영토나 위안부 문제가 되겠지만,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연구하고 있는 15-16세기 일본과 동아시아의 관계에서도 역사인식과 개별 실증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에도 역사인식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1. 중국측이 생각하는,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번국왕(蕃国王)의 의례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은 명나라의 외교의례를 기록한 『대명집례(大明集禮)』의 번국접소도(蕃国接詔圖)입니다(슬라이드 1). 명나라가 일본, 조선, 류큐, 안남 등 각 번국(蕃国)에 외교사절을 보낼 때 조서(詔書)와 칙서(勅書)와 공명(公命)을 들고 가게 합니다만, 그 국서, 외교문서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시각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번국접소도」에는 '번국접소의식'에 '의식(儀式)'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습니다. 또 영소(迎詔)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움직임을 넣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슬라이드 1



첫째, 이것은 조서라고 되어 있는데, 국서(國書)가 있고 명나라의 사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위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입니다. 그래서 명나라 사신이 번왕(蕃王)에 대해 북립남면(北立南面) 즉, 북쪽에 서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서가 남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번왕이 조서 앞에 가서 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립니다(跪礼). 그리고 나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조서는 봉서관(捧詔官)이라는 조서를 전달하는 역할의 관리가 탁자 위에 갖다 놓습니다. 다른 사람이 탁자 위의 조서를 개봉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읽어간다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광경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번왕은 줄곧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붙이고 고개 숙여 절을 하고 있습니다.

낭독(宣詔)이 끝나면 조서는 다시 원래 자리인 용정(龍亭)이라는 그릇 위에

올려놓아줍니다. 조서를 다 읽고 나면, 번왕은 먼저 고개를 숙인 채 다섯 번 절을 하고(五拜礼), 세 번 춤을 추듯 예를 올리고(三舞蹈), 그리고 '만세 만세 만만세' 라고 만세삼창을 부르며 대개 의식이 끝납니다. 이것이 중국이 생각하고 있던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번국왕의 의례였습니다.

2.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滿)의 의례 해석

번국접소도가 우리 일본인, 일본 학자·연구자에게도 언젠가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대명집례(『大明集礼』) 번국접소도를 모두가 봤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중국의 홍무제(洪武帝)나 영락제(永樂帝)로부터 책봉을 받을 때 거행된 의식에 대해, 지금까지의 일본사 연구자들은(중국사 연구자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시미츠가 남쪽에 있고 명나라 사신이나 국서가 북쪽에 있다는 구도로 이해하며, 요시미츠는 명나라 황제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였으며 국서에 배알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이는 책봉·조공관계로 보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현장, 외교 현장이 어땠나 하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보여주는 사료가 실은 일본측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슬라이드2). 요시미츠는 먼저 정원으로 내려와서 대문까지 가서 명나라 사신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사신을 데리고 정원으로 온 후에 자신은 얼른 의자에 앉아서 남쪽을 향합니다. 이어서 명나라 사신이 조서 즉, 황제의 국서를 받들어 국왕에게 올립니다. 요시미츠는 국서를 봅니다. 그 후 명나라 사신, 정사와 부사 중 아마도 부사 쪽이 회사품(回賜品)을, 일본측에서는 진상품을 서로 건네고 요시미츠가 다시 이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1402년 요시미츠 처소(北山殿)에서 명나라 사신 접견의례 (出典 : 橋本雄編 『週刊朝日百科 新発見! 日本の歴史』 23号 (室町2))

7

(일러스트 이타가키 마코토 (板垣真誠))

이를 다시 일러스트레이터인 이타가키 마코토(板垣真誠)씨의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슬라이드3). 요시미츠는 북좌남면(北座南面)하고 있고, 명나라 사신이 공손하게 국서를 봉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책봉·조공체제를 받아들인 요시미츠였지만, 매우 흥미롭게도 분명 국내에서만은 이를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고 명나라 사신은 그에게 봉물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예컨대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 거 자오광 선생님, 조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공통의 역사나 사료집을 만들 때, 하나의 현상에 대해 여러 가지 관점의 사료 내지는 서술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한 예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토론 3



중국 교과서에 묘사된 일본: '혁명사관'교육에서'문명사관'교육으로의 전환

마즈다 마미코 (松田麻美子, 와세다대학교)

머리말

중국의 교과서에 일본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것일까? ① 중국의 교과서를 둘러싼 상황 ② 고교 역사교과서에 묘사된 일본 ③ 다양화하는 교과서 ④ '혁명사관' 교육에서 '문명사관'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중국의 교과서를 둘러싼 상황 (슬라이드 1)

1985년 이전에는 중국의 교과서는 '교학대강(敎學大綱)에 의거하여 통일된 국정교과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일강일본(一綱一本)이라고 불렸다. '교학대강'은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지정하고 있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지도 아래 인민교육출판사가 '교학대강'의 작성도 교과서의 편집도 실시했다. 교육 목표는 사람들에게 혁명에 의해 역사가 진전한다는 혁명사관을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1985년 이후는 교육개혁이 시작되었다. 교육이 제도화되어 교과서의 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하나의 '교육대강'에 의거하여 복수의 교과서가 편집되었다(一綱多本). 국가교육위원회가 북경, 하북, 광둥, 사천, 상해 등의 교육기관에 교과서의 편집을 위탁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지방의 경제적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상황에 맞춘 교육을 위한 톱다운 개혁이라고 불린다. 근대화, 글로벌화를 지향한 교육을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교과서로부터 유물사관, 계급투쟁 등 혁명사관적 내용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1년에 '과정표준(課程標準)'이 도입되어 제도상 교과서의 편집자와 검정실시자가 분리되었다. '과정표준'은 교과서에 기재해야 할 항목만을 지정한 것이었다. 이는 교과서 편찬권력의 '하방(下放)'이라고 불렸다. 교과서는 문명의 진전, 근대화를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문명사관'에 의거한 것으로 전환되어, 하나의 '과정표준'에 의거한 다종류의 교과서(一標多本)라는 시대

로 접어들어간다.

슬라이드 1

1 중국의 교과서를 둘러싼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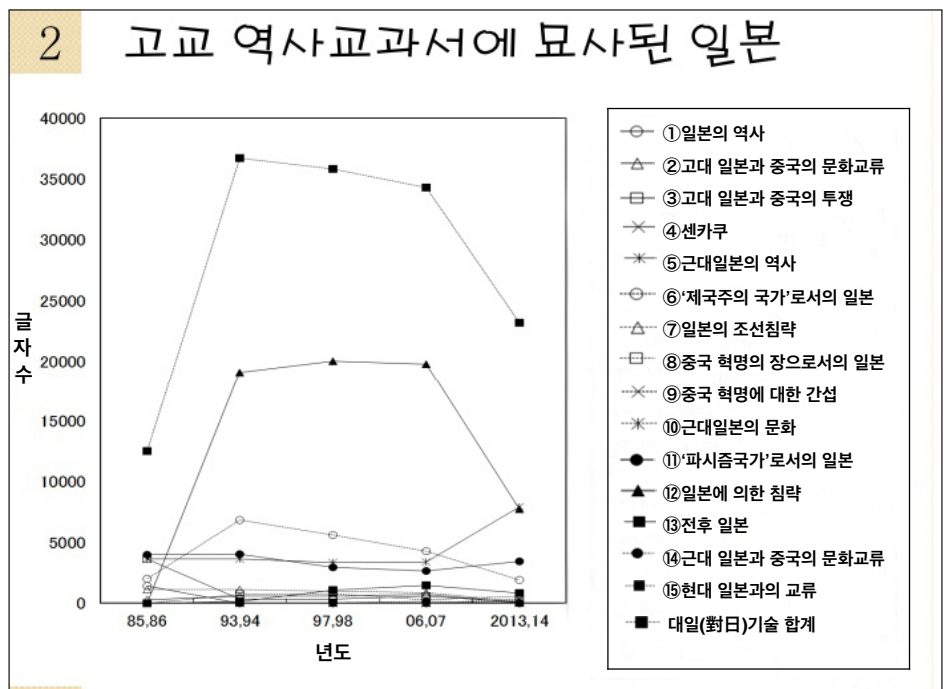
- 1985년 이전: '교학대강'에 의거한 통일 교과서. '일강일본'.
내용 지정은 상세.
- 1985년~ 교육의 제도화. 교과서 검정제도의 도입. '일강다분'.
→경제 격차 대응을 위한 톱다운 개혁
- 2001년 : '과정표준' 도입. 교과서 편찬과 검정의 분리. 내용 지정은 항목 뿐.
→교과서 편찬권력의 '하방', '일표다분'.
→역사교과서는 혁명 중시의 '혁명사관'에서 국가의 발전 중시의 '문명사관'으로 전환
→목표는 전제(專制)에서 민주, 인치(人治)에서 법치로의 전환.

2. 고교 역사교과서 (인민교육출판사판)에 묘사된 일본

(1) 고교 역사교과서의 대일(對日) 기술 문자수의 추이 (슬라이드 2)

1980년대에는 '일본의 침략'에 대한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1980년대 고교에서는 세계사밖에 가르치지 않았고, 태평양전쟁은 독일과 이탈리아와 비슷한 파시즘국가의 전쟁으로서 묘사되었으며, 항일전쟁으로서 취급되지 않

슬라이드 2



왔기 때문이다.

1989년 천안문사건을 거치면서 고교에서는 '중국근현대사' 및 '세계근현대사'가 교육되기 시작하여, 1993년 이후 '일본의 침략'에 대한 기술이 증가한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 '과정표준'의 채용 이후, '일본의 침략'에 대한 기술은 대폭적으로 감소했다(2013, 2014년판 교과서가 '과정표준'에 의거한 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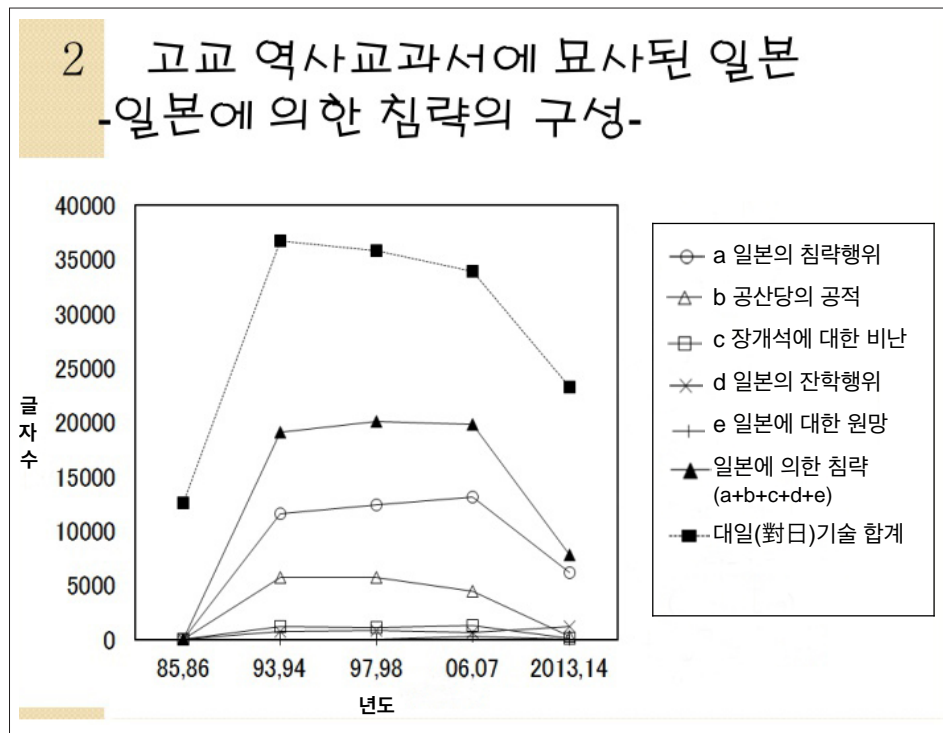
'전후 일본' 및 '현대 일본과의 교류'의 비중은 어느 교과서에서든지 일관되게 낮다. 한편, 2013년·2014년판은 메이지 유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근대 일본의 역사'가 '일본의 침략'에 대한 기술량을 상회한다.

'문명사관'에 의거한 '과정표준' 교과서에서 항일전쟁의 위상은 낮아지고, 그 대신 문명을 발전시킨 메이지 유신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2) '일본 침략'의 구성 (슬라이드 3)

교과서의 대일 서술 가운데 '일본의 침략'에 대한 기술이 절반 정도가 된다. '일본의 침략행위'는 항일전쟁의 개전, 청일전쟁 및 산둥출병 등의 전투상황을 가리킨다. '일본의 침략'에서는 '공산당의 공적'과 '일본의 침략행위'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었는데, 2013, 2014년판에서는 '공산당의 공적'에 대한 기술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남경대학살, 731부대 등의 '일본의 잔학행위'의 비중은 일관되게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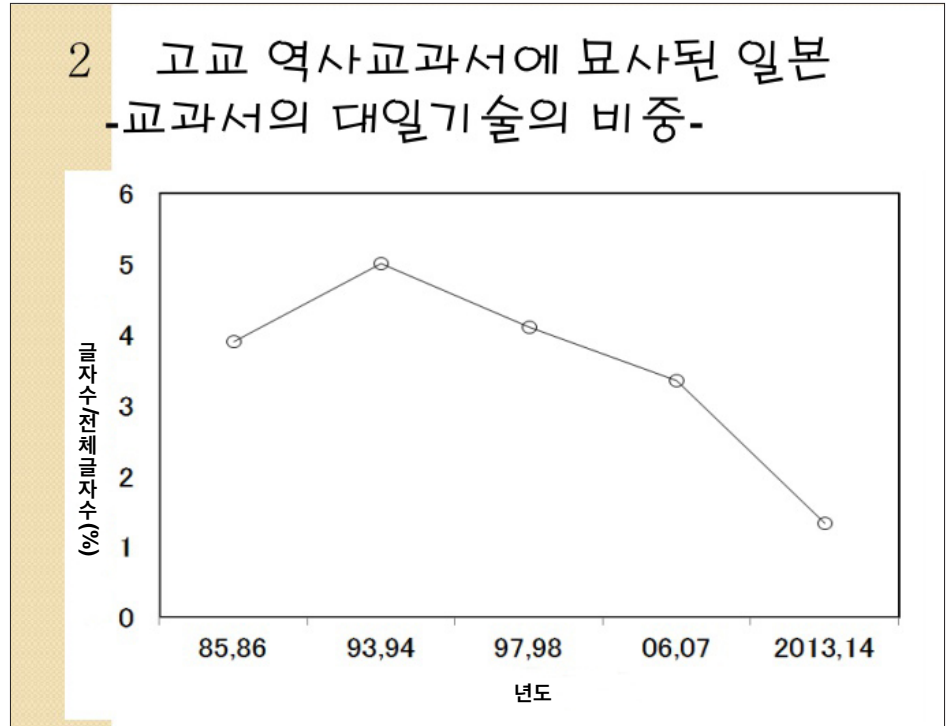
슬라이드 3



(3) 교과서에서 대일 서술의 비중 (슬라이드 4)

교과서 전체에서 점하는 대일 서술의 비중은 93, 94년판에서는 5%였는데, 점차 저하하여, '과정표준'에 의거한 2013, 2014년판의 교과서에서는 1% 정도까지 하락하고 있다.

슬라이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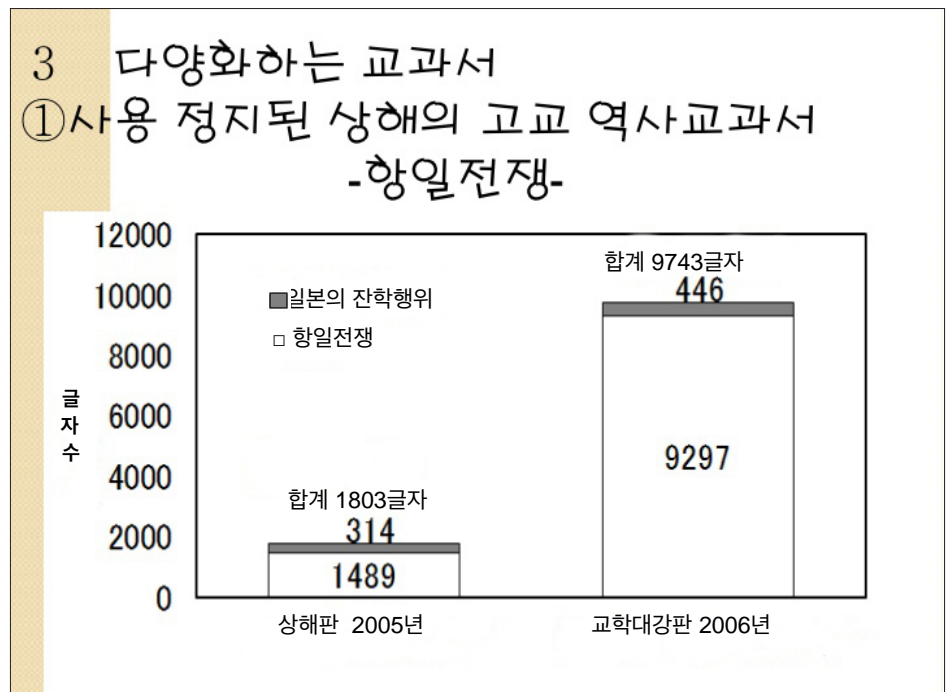


3. 다양화하는 교과서

(1) 상해의 역사교과서가 묘사하는 항일전쟁 (슬라이드 5)

2007년에 사용정지가 된 상해의 역사교과서는 '교학대강'에 의거한 2006년의 인민교육출판사 교과서에 비해, 항일전쟁에 대한 기술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기술내용도 간결하다.

슬라이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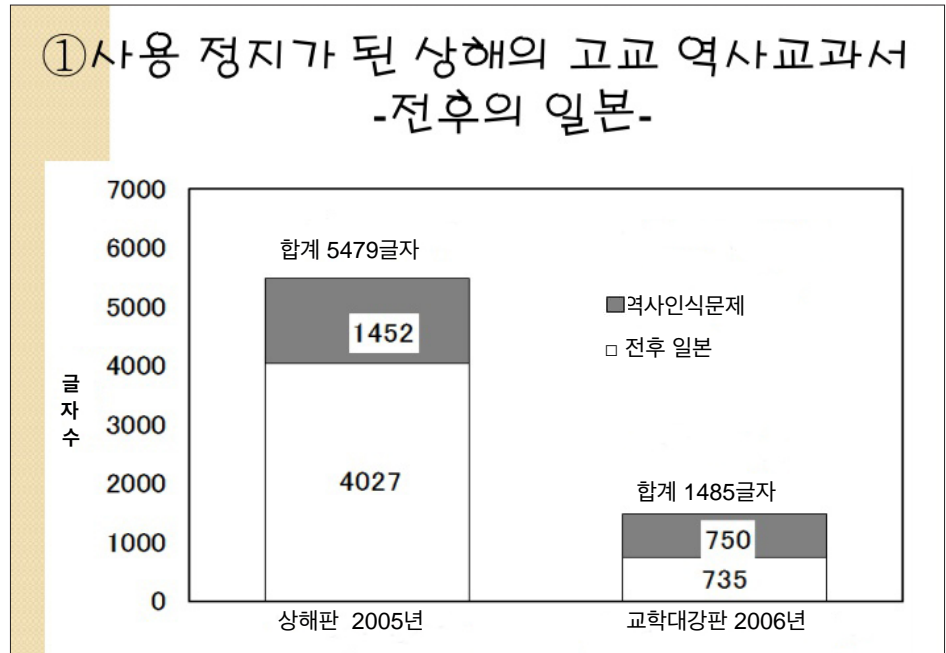


(2) 상해 역사교과서가 묘사하는 전후 일본 (슬라이드 6)

상해의 역사교과서에서 전후 일본에 대한 기술량은 인민교육출판사 교학대강판과 비교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학대강판에는 전후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기술이 많다. 극동군사재판 및 대일강화조약, 일본의 정치대국화 야망, 방위비 증대, 자위대 해외파견에 대한 경계, 일본정부가 아시아인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상해판은 전후 일본의 민주개혁을 정면에서 높이 평가한다. “일본의 전후 개혁은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이 목표로 삼아온 현대화를 완성시킨 자산계급에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 “전후 민주화가 고도경제성장의 출발점” 이라고 지적하면서, 헌법 제정, 재벌 해체, 농지개혁, 천황제의 변화, 동경올림픽을 목표로 한 국가건설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다른 한편, 방위비의 증대, 자위대의 해외파견, 독일과 비교하여 전후처리가 불충분하다는 점, 야스쿠니신사, 역사교과서 문제, 유엔 상임이사국에의 진입 희망에 대한 비판도 서술되고 있다.

슬라이드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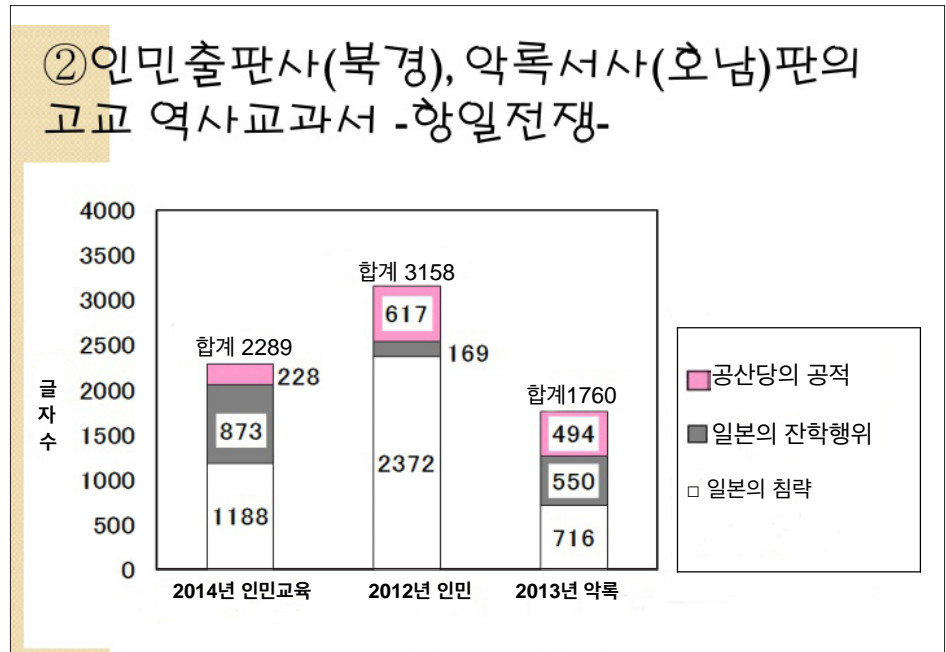
(3) 전국판 교과서에 묘사된 항일전쟁 (슬라이드 7)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중에 70%로 점유율 비중이 최대인 교과서가 악록서사(岳麓書社) 판이다. 한편, 인민출판사판은 과정표준정책 그룹의 책임자였던 베이징사범대학의 교수가 주도한 교과서인데, 이 둘을 비교하면 출판사에 따라 항일전쟁에 대한 기술량이 제 각각임을 알 수 있다.

인민출판사판의 내용은 이제까지 당의 기존 노선에 가깝다. 항일전쟁의 사상자 3,500만명, 직접손해액 1,00억 달러, 간접손해액 5,000억 달러라는 당의 공식견해가 반영되어 있다. 악록서사판에서는 공산당 성립에서 신중국 성립까지의 역사를 하나의 장 “신민주주의와 중국공산당”에 그것도 겨우 8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하고 있다. 공산당 공적의 위상이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학대강’에 의거한 인민교육출판사판의 교과서가 중국근현대사의 교과서 2권

가운데, 1/4 을 공산당 성립으로부터 신중국 성립까지 할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악록서사관은 항일전쟁의 사상자수, 손해액에 관한 당의 공식견해를 기술하지 않고, “중국의 군인 전사자는 130여만 명, 물적 손해액은 500여억 달러, 평민의 사상자와 손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고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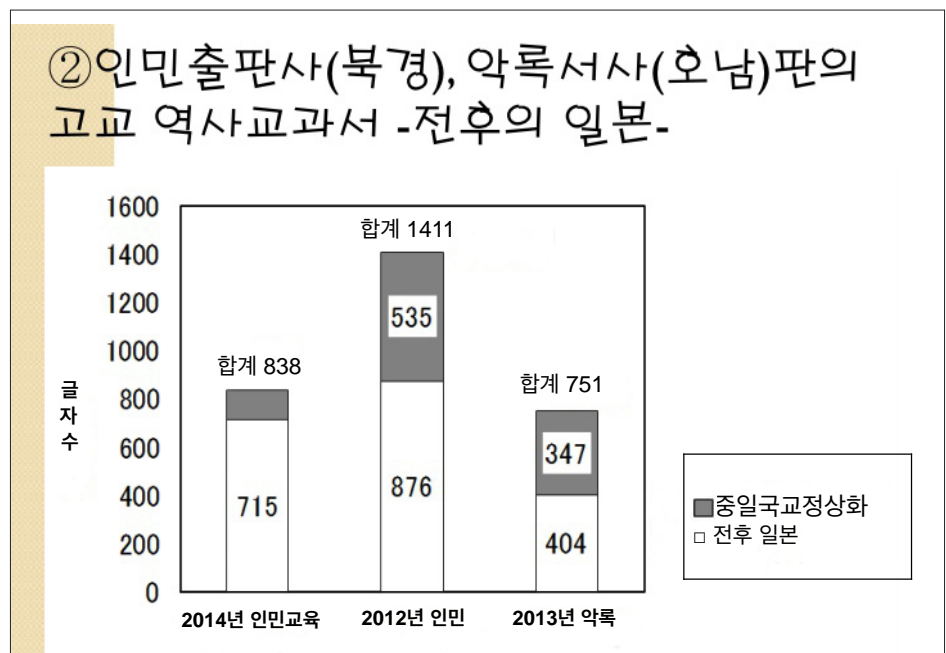
슬라이드 7



(4) 전국판 교과서에 묘사된 '전후 일본' (슬라이드 8)

인민출판사판 및 악록서사판은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통감, 깊은 반성의 표명이라는 중일공동성명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전후의 민주화, 경제 발전, 교육 중시라는 전후 일본의 발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슬라이드 8



4. '혁명사관' 교육에서 '문명사관' 교육으로 전환

중국의 여러분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 중국의 교과서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는 당의 '올바른 역사관' 을 강요하고 있기에 매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과정표준' 을 채용한 교육개혁의 배경이 되었다 (슬라이드 9).

교과서를 집필한 학자들은 “중화민족의 잘못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이제 까지의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고 있지 못하다. 교원은 기본적 사료도 알지 못한 채 학생들에게 논평을 강요하고 있다” 고 지적한다. 또한 “일본에 의한 침략을 기억하는 것은 일본을 포함한 평화를 위해서다. 혁명 후에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 지가 중요하다. 교과서는 역사를 정확하게 재현하고 그 내용은 안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는 발언도 있었다.

슬라이드 9

4 '혁명사관' 교육에서 '문명사관' 교육으로 전환

- 사람들의 교과서에 대한 불신감. 당의 '올바른 역사관'의 강제, 매력이 없다(인터뷰 조사 결과).
→ '과정표준' 채용의 기초로
- 중화민족의 잘못도 말해야 한다. '교학대강'의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지 못한다. 교원은 기본적 사료도 알지 못한 채 학생들에게 논평을 시키고 있다(대학교수).
- 일본에 의한 침략을 기억하는 것은 일본을 포함한 평화를 위해. 혁명 후에 어떻게 나라를 발전시키느냐가 중요. 교과서는 역사를 정확히 재현하고 내용은 안정되어야 할 것(대학교수).

슬라이드 10

- 일본에 대한 엄중한 보도가 있는 한편, 교과서의 항일전쟁의 위상(공산당의 항일전쟁에서의 공적)은 저하, 일본의 전후 민주개혁을 평가.
- 시진핑 정권 성립 이후는 역행. 시진핑의 상해 교과서 비판. '과정표준' 판 교과서를 비난하는 보도도. 작년 말 인터넷에 돌아다닌 개정중인 '과정표준'은 '교학대강' 내용으로 역행.
- '문명사관'에 의거한 현재의 '과정표준'은 중앙당교, 당 중앙 문헌연구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중국 교육부가 결단한 것.
- 중국 공산당 내의 의견도 통일된 것은 아니다.

일본에 대한 엄중한 프로파간다가 존재하는 한편, 교과서에서 항일전쟁의 기술량은 크게 감소하고 항일전쟁의 위상도 저하하고 있다(슬라이드10). 특히 항일전쟁에서의 공산당 공적에 대한 분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일본의 전후 민주개혁이 높이 평가되기 시작했다.

시진핑 정권 성립 이후는 언론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일부 학자는 예전처럼 한 종류의 국정교과서로 되돌려야 한다고 당 중앙에 요청하고 있는 정도다. 다른 한편, '과정표준'은 중앙당교 및 당 중앙 문헌연구실의 의견도 청취한 위에 최종적으로 중국 교육부가 결단한 것이다. 공산당 및 중국 국내에서도 교과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의 공산당 내 의견도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토론 4



동아시아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하여

쉬 징보 (徐 静波, 푸단대학교 [復旦大学] 교수)

머리말

푸단대학교의 쉬 징보라고 합니다. 지정토론자로서 오늘은 주로 조광 선생님, 거 자오광 선생님,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 세 분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 제 나름의 소감 또는 코멘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조광 선생님 발표에 대한 코멘트

먼저 한국의 조광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사연구, 특히 자국사, 국사 연구는 주변 국가들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조광 선생님은 옛 고구려 역사를 한 예로 들었습니다만, 중국과 한국의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사, 자기나라 역사의 일부라고 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지금까지의 입장으로는 어디까지나 중국의 지방 정권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디만, 한국과 중국의 인식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거의 십 년 전 이미 『발해사(渤海国史)』나 『고구려민족과 국가의 형성 및 그 변천』 등 두터운 연구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서들은 모두 『(중국) 동북변강연구(東北边疆研究)』라는 총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관점’의 힘은 아직 여전합니다. 만약 한국 학자들께서 흥미나 관심이 있으시면, 중국에서 출판된 고구려 연구와 발해 연구를 읽어보셨으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조광 선생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거 자오광 선생님 발표에 대한 코멘트

거 자오광 선생님은 5년 전에 『택자중국(宅兹中国)』이라는 매우 영향력 있는 대작을 발표하셨습니다. 그 주된 취지가 담긴 일본어 번역서 『중국재고(中国再考)』라는 책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와나미서점(岩波書店)에서 출판

되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제 26 회 아시아태평양상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 자오광 선생님은 오늘의 발표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러한 역사인식 방법은 그릇된 결론을 유도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급적 그 시대로 되돌아가서 당시의 역사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구려에 대해서도 발해에 관해서도, 혹은 그러한 종류의 어떤 경우에 관해서도 지금의 정치적 영역,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의 판도, 지금의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의 판도가 아니라, 그 당시 역사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서 역사 문헌, 현재의 고고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에서 거 자오광 선생님은 중국과 일본, 한반도에 대해 어떻게 사건을 보고 있는지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거 자오광 선생님이 이전 논문에서도 매우 자세하게 분석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거 자오광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 자오광 선생님께서 예로 든 네 개의 중국 국사책은 대부분이 문화대혁명 이전에 쓰여진 것이며, 물론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도 판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 혹은 1990년대 전반에 교과서 또는 모종의 형태로 널리 읽힌 듯합니다만, 지금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 미타니 선생님 발표에 대한 코멘트

마지막으로 미타니 선생님 발표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우선 한국, 중국, 일본의 세 분 학자의 발표를 듣고 공통된 소감은 내셔널리즘의 경향이 거의 풍기지 않는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냉정한 학자의 입장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거 자오광 선생님은 오히려 과거 영향력이 컸던 중국의 국사 저작에 대해 냉정하게 반성하고 일정한 비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미타니 선생님 발표에 의하면, 중앙교육심의회는 역사 교과서에서 일본의 근현대사를 '근대화' '대중화' '글로벌화'의 세 축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해봤습니다. 세 나라의 모든 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역사입니다만, 1894-1895년의 청일전쟁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일본에는 일시적으로 50년에 걸친 전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만약 과거의 전쟁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없다면 진정한 평화주의가 성립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제가 본 미타니 선생님 발표문 가운데, “일본의 경우로 말하자면, 그 다음의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20세기 초반의 이른바 ‘제국주의’ 를 무시할 수 없다. 국민의 거주지에서 벗어난 다른 언어·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를 지배하고……”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중국과 타이완,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역시 그러한 역사를 무시하고서 제대로 된 일본 근현대사를 서술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중국인이, 그리고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교과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는 차라리 이와나미신서(岩波新書)의 10권으로 된 『일본근현대사』 문고본을

중국어로 번역해서 중국의 독자들에게 읽혀야겠다고 생각하여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자의 한 사람으로서 홍콩의 중화출판공사와 제휴해서 10권 전부를 중국어로 번역하고 계획상으로는 금년 연말까지 10권 전부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미 5권을 출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6-2010년에 이와나미서점에서 출간된 것입니다. 홍콩에서 출판된 것은 번체(繁体) 중국어라서 중국대륙에서 얼마나 확산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상해인민출판사 등 몇몇 출판사에서 간체(簡體)로 10권의 일본근현대사를 출판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맺음말

서로 상대국의 사람들이 자국의 근현대사, 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후에, 가능하다면 거 자오광 선생님의 제안처럼 민간 레벨, 학자 레벨에서 동아시아 지역사를 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사들의 대화’진전을 위한 제언

정순일 (鄭淳一, 고려대학교 조교수)

머리말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의 정순일입니다. 발표자 및 토론자 선생님들의 좋은 발표와 토론으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들의 발표와 토론을 참고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새로운 출발에 앞서 : 선행 사례의 파악

우선 대학의 전임교원이 되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대학원 지도학생은 아직 없지만, 후배들로부터 어떻게 연구를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그 때 “관련 자료를 전부 수집하라”. “선행연구를 꼼꼼히 조사하고 읽어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말합니다. 우리가 한중일 국사들의 대화의 가능성에 관해 논의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연구의 출발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비슷한 사례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한중일 국사들의 대화의 가능성과 같은 시도가 과거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류 지에 선생님의 문제제기에서도 한중일에서는 2006년 아베 신조 수상 발언에 의해 역사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 2002년부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한일역사공동연구회가 발족되어 3년간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2010년 3월에 각각 1기와 2기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부 레벨 또는 국가가 지원하는 레벨의 공동연구활동입니다만, 새로운 출발에 앞서 참고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정부 레벨, 국가 레벨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민간 레벨의 학술교류도 많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한국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일 간에는 『마주보는 한일사(일본어판: 日韓交流の歴史)』, 『조선통신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과 우호의 조선통신사』 라는 공동의 역사교재를 발간한 예가 있

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참가한 것으로는 『미래를 여는 역사』, 『새로운 동아시아 근현대사』라는 성과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2. 한중일 관계사 사전 편찬의 시도를 향해

또 류 지에 선생님께서 가칭 『중일역사사전』 간행 제안도 하셨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조광 선생님께서도 한중일 관계사 사전도 만들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나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떠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서로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를 들자면, 동북아역사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직 간행되지는 않았지만, 『동아시아관계사 사전』을 편찬하고 있으며 최종 수정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모임에서 한중일 관계사 사전 편찬을 시도한다면, '참고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 가까운 장래에 발간될 사전도 하나의 참고로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한국 고교 교육의 '동아시아사' 시도

이어서 와세다대학교의 마즈다 선생님께서도 역사교육의 측면에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 그에 관련된 한국의 경험을 조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차원의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4년 수업부터 도입하였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커리큘럼에 의한 교과서가 수업현장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동아시아사' 과목,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장점이 무엇인가 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한중일 사람들이 공통의 이해를 만들어나가자고 하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자 한다면, 한국의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참고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덧붙이는 말: 차세대 연구자의 학술교류 및 대화의 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비슷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신진연구자, 차세대 연구자의 학술교류나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자는 제안입니다. AFC(아시아 미래회의)라고 하는 회의도 그러한 성격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 한정한다면 이미 활약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함께 논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신진 레벨의 연구자들(과감히 제안한다면 한중일의 고교생들)이 모여 서로 역사인식의 차이를 공유하고, 왜 일본, 중국은 그렇

게 생각하는지, 왜 한국인은 그러한 이야기를 되풀이하는지 등, 조금이라도 이른 단계에서부터 대화를 해 나가고 인식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6



국사의 용어 통일과 목표 설정

김경태 (金 囿泰,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들어가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경태라고 합니다. 책에서 뵈던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에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생각하고 있던 바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용어 통일 문제

첫 번째는 동아시아 삼국의 공통의 사건에 관한 용어 통일 문제입니다. 제 전공분야는 방금 화제가 된 '임진왜란'입니다. 일본에서는 '분로쿠-게이초의 역(文祿·慶長の役)'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만력조선역(万曆朝鮮役)'으로 불립니다. 한국의 임진왜란의 '임진'이라는 것은 간지(干支)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하지만, '왜란'의 '왜(倭)', 즉 경멸의 의미가 담긴 정치적 용어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다지 역사적인 용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진전쟁'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학술지 등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 아직 한국의 국민정서에는 맞지 않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나라에서도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나라가 합의 가능한 통일된 용어를 만들려고 한다면 더욱 큰 일이 아닐까, 이를 무리하게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보고자 합니다.

2. 국사 연구의 목표 설정 문제

두 번째, 국사 교과서, 국사 연구의 목표를 어떤 것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방금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국사의 지금까지의 목표는 자국의 자존심, 자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경향이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의 국사 연구는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발표가 있었습시다만, 이에 관해 뭔가 부연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지는 않은지 여쭙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원탁회의·토론

사회 : 남기정 (南基正) 총괄 : 류지에 (劉傑)



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당초에는 쟁점을 발견하고 이에 관해 토론이 가능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고, 여러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니 논쟁이 이 회의의 목표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쟁점을 끄집어내는 것보다 다양한 각도,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회의의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골라내고, 문제제기는 더 잘 다듬어나가는 방향으로 남은 시간을 썼으면 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러한 점은 꼭 다뤄주었으면 좋겠다는 보완, 코멘트, 질문 등이 있으시면, 두분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말씀해주실 분 계신지요. 간단한 자기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국사 취급과 역사교육 문제

방청객 1 아사히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가와사키 다케시(川崎剛)라고 합니다. 정치적,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제기하는 데 많이 주저됩니다만, 오늘 화제로 삼은 지역에는 북조선이라는 나라 역시 존재합니다. 북조선의 공식적인 견해를 어딘가에서 참조할 수 없을까요. 북조선에도 공식적인 국사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한중일과는 상당히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950년 6월 25일의 한국전쟁에서 어디가 먼저 침공했는가라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타니 선생님이 제안한 자료집 등에 수록한다면, 그런 것들을 읽고 싶습니다.

남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한 분 정도 말씀을 들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계시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2 호쿠리쿠대학교(北陸大學)의 이강철(李鋼哲)이라고 합니다. 제 분야는 경제학입니다만, 역사가, 역사전문가들의 말씀에도 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듣고 눈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들 정도의 수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회의에서 중국어도 한국어도 일본어도 통역 없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계는 매우 편안한 회의였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주제는 역사가들의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제 전문분야가 역사는 아니지만, 호쿠리쿠대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중일문화교류사 등 역사관련 수업을 하게 되어 그 이후로 역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하는 사람·교과서를 만드는 사람과 실제 교육현장과의 격차를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고교 등의 역사교육은 근대, 메이지 유신까지로 끝나고 그 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여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종종 말해집니다. 확실히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근대사, 중일교류사를 가르치면서 근대사에 대해 일본의 학생들과 대화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관심이 없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인 것이 현실입니다. 메이지 유신에 대해서조차 일본인 학

생들은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물론 학력차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관심이 적다는 점과 역시 교육 방법의 문제 등으로 국민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못합니다.

중국과 한국의 교육현장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중국에서는 근현대사를 거꾸로 중시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반대입니다. 이처럼 나라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중일 삼국이 역사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만, 우리는 미래를 향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설계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래의 젊은이들, 20년, 30년 후의 젊은이들이 동아시아의 관점에 서서 제대로 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또 교육현장에서는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여러분께 통찰력 넘치는 지혜나 코멘트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공통의 미래를 위해 '역사'·'역사가' 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으로부터의 코멘트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해주신 세 분 선생님의 총괄적인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류 지에 선생님께 총괄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선생님들의 발표에서 언급하지 못한 것, 놓친 것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혹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서 더 심화되거나 새로워진 사고를 추가적으로 제시해주셔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세 분의 선생님께 공히 듣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문제제기, 즉 이 지역에서 '지(知)의 공동체', 아시아 공통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역사 또는 역사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합니다. 이 지역에서 '지의 공동체' 현상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것인지, 이를 위해 선생님들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기 모인 분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대로 조광 선생님부터 부탁 드립니다.

조 여러 가지로 토론자 선생님들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토론자의 공통인식은 아시아의 역사를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는지, 상호 역사인식을 어떻게 하면

일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적인 공유의 접근방법이 중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적어도 일단은 전체적인 시야에서 그 사건들을 볼 필요가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란 것이 자체가 사건과 해석의 결합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는 살아 있는 생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변화합니다. 그 변화하는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사회자가 지금 제시한 지역공동체 혹은 아시아 미래 구축을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이해의 강화를 위해 어떤 것을 해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교류, 보다 젊은 청소년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NGO 레벨에서의 교류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저 자신 정부 간 대화에 오랫동안 참가한 경험에서 느끼는 것은 NGO 간 교류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간의 교류가 정부 간 교류보다 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느낀 것입니다. 정부 간 교류에서는 자칫하면 자국민의 대표선수가 된 것처럼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 인식·이해를 위해서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선 민간인의 대화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간 교류도 끊임없이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일 역사대화에 참가하기 시작했을 때는 고이즈미 정권기였습니다. 고이즈미 총리의 제안으로 그 대화가 스타트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거쳐 요즘은 한일 간 공식적인 역사 대화가 단절되었습니다. 정부 간 대화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될 뿐 아니라, 그 이상으로 민간인의 대화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역사가 목표로 삼는 것은 공존과 번영입니다. 한중일 삼국이 공존하고 공히 번영하며 다 함께 평화를 향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지향할 때는 그런 방향의 역사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또한 이런 시각에서 과거의 역사를 해석하려는 노력이 연구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거 자오광 선생님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거 조광 선생님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완전 찬성입니다. 우리는 한정된 국가의 입장을 뛰어넘는다는 공통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실은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새로운 감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조광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단어, 명사이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토지, 국토에서 등장한 여러 나라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는 그런 입장, 그런 발상은 이미 시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국토에 존재했던 나라들은 중국이 아니다, 혹은 현재의 중국정부와의 접점은 이외로 작다는 인식이 서서히 정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류 지에 선생님의 ‘국사’라는 단어에 대해서입니다만, 현재 중국에서는 ‘국사’라는 단어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범주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언제 ‘국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기에 가장 유명했던 『국사대강(國史大綱)』입니다. 당시는 민족의 존망의 위기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국사' 라는 단어가 특히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중국은 서서히 발전해왔기 때문에, 내셔널리즘의 전성기에는 '국사' 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한편으로는 존망의 위기에 서게 되었을 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 종종 내셔널리즘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보통 정부의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역시 국사의 의미라는 관점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국사란 역사인식인가 아니면 역사서술인가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하시모토(橋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범주를 뛰어넘는 경우, 역사인식을 전진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아시아 삼국에서 국사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은 지금 중국에서 가장 곤란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줄곧 '동아시아사' 또는 '동양사' 라는 단어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봐주세요. 중국에서는 '동아시아사', '동양사' 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그다지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을 뛰어넘어 역사를 기술하는 경우, 중국이 가장 곤란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 레벨, 민간의 파워를 살리지 않는다면, 공통된, 공유 가능한 역사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와 정부에 좌우되어 역사를 기술한다는 상황이 줄곧 이어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레벨, 국가의 입장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공통의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정치제도. 둘째, 이데올로기. 셋째, 국가 각각의 배경. 넷째, 역사기술의 습관 혹은 경향입니다. 이 네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공통된, 공유 가능한 역사는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미타니 선생님께 부탁 드립니다.

미타니 회의 막바지에 이르러 유의미한 의견을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니다만, 제 자신은 지금까지 동아시아에 전개된 '지의 공동체' 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류 지에 선생님과 10년도 더 이전부터 시작한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민간 레벨에서 국경을 넘는 공동작업이 잘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적은 시작하기 전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다릅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21 세기 초에 류 지에 선생님께서로부터 “함께 중일 간 공동연구를 하자” 고 제안 받았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두려웠습니다. 확실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서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여 3~4년 지난 즈음에 이 작업은 괜찮을 것 같다고 느끼게 된 때는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서로 갖고 있는 그런 공포심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좋은 일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공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래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여러 논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째,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쳐봐서 느끼는 건데요, 대부분의 학생이 역사에 흥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 특히 일본인이 이웃나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한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극복할 방법의 하나로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만, 지금 문부과학성이 고교의 지리역사과에 도입하려고 하는 ‘역사 총합’ 가운데 추천하고 있는 액티브 러닝입니다. 구체적인 논점을 드러내고 자료를 서로 갖고 와서, 학생들이 이리지도 않고 저리지도 않다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없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곤란하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유도한다면 역사를 자기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교과서를 단순암기하는 방식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곧 잊어버립니다. 일본에서는 일부 열성적인 고교 선생님들이 꽤 노력해서 실제로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받아들여져서 국내에 널리 퍼질지 말지가 커다란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 자오광 선생님이 강조한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공통의 동아시아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입니다만, 이는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하면, 특별히 우수한 엘리트만이 모여서 특정 테마를 설정하고 어떤 제한 없이 논의를 충분히 하여 하나의 책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고 그런 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예를 들면 고교 교과서 레벨의 삼국 공통의 교재를 만든다든지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를 혼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대학 레벨의 동아시아사의 교과서를 이미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한국에서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어판은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학 레벨의 교과서는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어서 다른 책을 보지 않아도 중요한 지식은 거의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출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보면 다른 곳에서는 그다지 성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간략한 서술이 중심이 되는 고교나 중학 교과서에 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꽤 오래 전부터 가졌던 제 인상입니다만, 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료집 제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만, 이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세 나라 언어로 각각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작 과정에서부터 번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일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것 역시 처음부터 테마를 한정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관계할 사람의 선정 문제도 큰 일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본다면, 특히 젊은 학자들이 대학원생을 동원하여 만드는 방법이 가장 손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 그 사람들은 일본인의 경우, 중국사 및 한국사 전공의 학자들로서 일본사 학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사 학자들을 어떻게 동원하는가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생각하기보다는 낡는 게 더 쉽다” 는 말처럼 실제로 착수해버리는 게 가장 좋을지 모릅니다. 당면 문제가 되고 있는 국제관계, 특히 근현대 부분

에 대해서는 어쨌든 착수해버리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단, 저 자신은 지금 제가 직접 이끌어갈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조광 선생님도 거 자오광 선생님도 이런 발상에 대해 꽤 흥미롭다고 생각해주신 것처럼 느낍니다만, 세 나라에 걸친 작업이 되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선정된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으로 우선 시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류 지에 선생님께 부탁 드립니다.

류 발표해주신 선생님들, 코멘트해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미타니 선생님 말씀은 거의 오늘 회의 전체의 정리와 같이 느낍니다만,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번은 '역사들의 대화' 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은 이전부터 이른바 '역사 대화' 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 시도는 10년 이상 동아시아 여기저기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그에 비해 이번의 대화를 처음으로 '역사들의 대화' 로 자리매김하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화는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고, 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많은 선생님들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정부 주도의 대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지만, 이번은 학자들만의 네트워크, 아즈미 국제교류재단이라는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발적인 대화였다는 점에서 의미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종래의 대화는 어느 쪽이나 하면 자기 자신의 입장을 상대에게 설명하는, 혹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대화라는 성격이 매우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상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방향 전환에 저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역사 대화의 의미는 바로 이런 점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속한 나라의 역사관, 국사라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원에 비유한다면, 자기 자신의 원 밖에는 수많은 똑 같은 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국사 연구자가 인식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원을 뛰어넘어 이



웃하는 원에도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역사 대화라는 문제의식을 우리는 이번 대화에서 공유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또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구체적인 제안도 표명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타니 선생님이 제기한 역사 사료집의 편집작업, 조광 선생님이 제안한 삼국의 역사사전 편집작업입니다. 어느 것이든 상당히 커다란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가는 것이 좋을가에 대해 선생님들과 함께 ‘국사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씩 구체화해가고자 합니다.

앞서 이마니시상으로부터 최저 5년 간은 지속시키고 싶다는 강력한 지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만, 예를 들면, 사료집 편찬, 혹은 사전 편찬을 하게 될 경우, 테마를 정하고, “이 테마라면 우리는 이런 사료를 사용하여 연구하고 있다”고 하여, 각국이 연구상 이용하고 있는 사료를 서로 내놓고 상호간에 어떤 사료를 사용하여 연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 사료에 대한 해설을 발표하는 일과 같은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도 하나의 대화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대화를 어떻게 지속시킬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숙제입니다만,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아츠미재단의 리더십과 지원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이마니시상을 비롯하여 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화와 연구활동을 계속해서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귀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기

이마니시 준코 (今西淳子)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기타큐슈 국제회의장 국제회의실에서 원탁회의 <한국·중국·일본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을 주제로 한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일본, 중국, 한국에서 온 역사 연구자들이 모여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다. 88명 정원인 회의장이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맨 처음 와세다대학교의 류 지에 (劉傑) 교수가 기초발제에서 “왜 ‘국사들’의 대화인가: ‘국사’와 ‘역사’의 사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10여 년간 일본·중국·한국의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대화의 성과, 또 유학생의 증가와 대학의 국제화에 따른 ‘국사’에서 ‘역사’로의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국사들’의 대화를 보다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의 연구자 간 교류를 더욱 추진함과 동시에, 10년후, 혹은 20년 후에 본격적인 국사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조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동아시아의 역사문제는 자민족중심주의와 국가주의적 경향에서 유래한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최근에 편찬된 학교 교과서, 학회의 일본관계사, 중국관계사 서술에 대해 분석했다. (1) ‘전근대 중국에 대한 서술’에서는 고구려사를 둘러싼 혼란을 통해 ‘화이의식’을 언급하였으며, (2) ‘전근대 일본에 대한 서술’의 결론에서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교과서에 나타나는 전근대 일본은 문화후진국으로서 (조선의) 선진문화의 수역자, 그리고 침략자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는 일면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일본을 하나의 정식 관계주체로 간주하지 않는 국사교과서의 인식은 한국을 둘러싼 현재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한일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3) ‘근대 동아시아에 대한 서술’에서는 19세기 이후의 동아시아는 일국의 상황만으로 자국사를 서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삼국의 역사가 서로 얽혀 있는데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중국과 일본의 근현대사에 관한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 한국전쟁의 경우에서조차 국내정치나 경제·사회에 관한 설명이 넘치는데, 참전한 각국의 논리가 소개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한다. 근현대사의 경우 중국사 혹은 일본사와 연결시켜 설명함으로써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자신을 읽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타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 까라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 다음으로 거 자오광 푸단대학교 교수는 ‘몽고 침략’ (1274·1281), ‘쓰시마 정벌’ (1419), 임진왜란·정유재란 (1592·1597)을 예로 들어 일국사

와 동아시아사의 차이를 논했다. 일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중심을 설정하는 경우, 중심부는 명확해지지만 주변부는 희미해져 버린다. 만약 여러 개의 중심이 있다면 여러 역사권이 형성되고 그것이 겹치는 부분이 나타난다. 동아시아사를 서술할 경우, 이 역사권이 겹치는 부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몽고 침략에 의해 일본이 처음으로 ‘신국’ (神国)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일본문화의 독립의 단서가 열리고, 중국의 ‘화의질서’ 에서 이탈했다고 일본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는 몽고화되어 몽고인이 일본을 침략할 때 그 전 초기지가 되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몽고·원나라를 ‘자국사’ 로 간주하며, 몽고의 침략은 몽고와 일본 및 고려라고 하는 중국 외부 사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인식된다. 동아시아 전체의 시야에서 보면 몽고·원의 일본 침략(또는 고려를 속국으로 만든 것)은 동아시아의 정치적 국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각국의 자아의식을 환기시키고 동아시아의 ‘중국 중심’ 의 풍조가 차츰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쓰시마 정벌’ 의 발생 및 해결은 그 후 수백 년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안정으로 연결되었다. ‘임진왜란’ 은 그때까지 안정되어 있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크게 뒤흔들었으며 훗날 동아시아가 공유하고 있던 아이덴티티의 붕괴라는 사태의 복선을 깔았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도 신속하게 수습되고 동아시아의 균형 잡힌 국면은 19세기에 서양 국가들이 무력을 배경으로 동양에 진출하기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중국 역사에서는 몽고·원의 일본 침략과 고려 지배는 그저 몽고인의 세계지배 야심이 표출된 것에 지나지 않고 조선이 쓰시마를 정벌한 것도 이웃나라끼리의 분쟁일 뿐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에 이르게 되면, 일본은 침략자이며 중국은 조선의 국제적 우방으로 양국이 손을 잡고 일본 침략을 물리쳤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만약 역사학자가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이를 재검토한다면, 새로운 인식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한다.

그 다음 미타니 히로시 동경대학교 명예교수는 국사들의 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1) 일본의 고등학교 역사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2) 일본사 교과서 가운데 세계·동아시아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의 고등학교에서는 ‘역사종합’ 이 필수교과가 될 예정이다. ‘역사종합’ 은 (a) 세계사와 일본사를 융합하되, (b) 근대사에 초점을 맞추어, (c) 적극적 학습을 장려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향에 학회나 교육위원회가 협력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일본사 연구와 교육에서 가장 최근에 발생한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는 일본을 동아시아 속에 자리매김하려는 연구동향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외로부터 밀려드는 정치적 압력을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전개가 가능할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3) 서로 이웃나라의 국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중일 삼국의 지식인들이 서양에 대해 갖는 열렬한 관심과 이웃나라에 대한 무관심의 대조적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우선 상대국이 어떠한 문맥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 이웃나라 역사에 대해 이미 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국사들의 대화'의 궁극적 과제라고 결론짓는다.

그 다음으로 한국, 중국, 일본 역사의 대가들의 강연에 이어 6명의 중견·신진 연구자의 토론이 있었다.

기타큐슈시립대학교의 야오 케이스케 교수는 한중일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논점을 정리하여, 동아시아와 근대의 관계에 대해, (1) 유럽중심주의로서의 '근대', '동아시아' 개념에 대한 비판, (2) '동아시아' 개념의 타당성에 관한 여러 해석을 소개했다.

홋카이도대학교의 하시모토 유 준교수는 1402년에 집행된 아시카가 요시미츠에 의한 명나라 사신 접견의례를 복원하고, 요시미츠가 명나라 사신을 배려하고 경의를 표하면서도, 어떻게 자존의식을 만족시키는 의례로 환골탈태시켰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일본사를 서술하는 경우에 대외관계사의 성과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결하지만, 그저 단순히 외국사의 문맥을 안이하게 적용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쌍방의 문맥에 주의하면서 각국 사료를 실증적으로 대조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국사'는 치우친 것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와세다대학교의 마즈다 마미코씨는 "중국 교과서에 나타난 일본: '혁명사관' 교육에서 '문명사관'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역사교과서의 변화에 대해 발표했는데, 시진핑 정권 성립 후로는 과거로 회귀하는 양상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푸단대학교의 쉬 정보 교수는 동아시아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려면 자국의 입장에 구애되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으며, 또 자국의 자료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각국의 역사자료나 고고학의 성과를 이용해서 객관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학교의 정순일 교수는 '국사들의 대화' 프로젝트와의 공통점·차이점을 분석하고 생산적인 과제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고등학

생·대학생 차원의 ‘대화’ 또는 학술교류도 시야에 넣어 신진연구자 간 교류를 촉진시키는 방법, 한국의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경험을 참고해서 동아시아의 ‘국사’ 서술방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고려대학교의 김경태 연구교수는 공통의 역사적 사건에 관한 용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진왜란’이 아니라 ‘임진전쟁’이라는 용어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정서에는 아직 이르다”는 반론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국사 교과서’와 ‘국사 연구’가 가져야 할 ‘목표’는 ‘자신감’이나 ‘자랑’이었지만, 그것은 이미 유효한 목표가 아니며, 각국의 정치, 역사적인 특징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탁회의 <한국·중국·일본의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은 공익재단 아츠미 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関口) 글로벌연구회(SGRA)가 2013년 3월에 방콕에서 개최한 제1회 아시아미래회의 중의 원탁회의 <글로벌시대의 일본연구의 현상과 과제>를 시작으로 검토를 거듭하여, 2015년 7월 도쿄에서 개최된 포럼 <일본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에서 와세다대학교의 류지에 교수가 제안한 <아시아 공공지(公共知)로서의 일본 연구>를 받아들여 발전시킨 것이다. 본 회의는 앞으로 5회에 걸쳐 계속될 프로젝트의 첫 회로서 제3회 아시아미래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앞으로는 테마를 압축시켜 일본인 일본사연구자, 중국인 중국사연구자, 한국인 한국사연구자 간의 대화와 교류의 장을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의 한 가지 특징은 언어 문제이다. 본 회의에서는 다음의 6인이 동시통역을 맡았다. 【日本語⇔中国語】丁莉(北京大学), 宋剛(北京外国語大学) 【日本語⇔韓国語】김범수(東京学芸大学), 이혜리(한국외국어대학교) 【中国語⇔韓国語】李麗秋(北京外国語大学), 孫興起(北京外国語大学).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같은 분들이 계속해주셨으면 한다. 본 회의의 강연록은 SGRA 리포트로 정리하여 일본어판, 중국어판, 한국어판을 발행할 예정이다.



강사약력

■ 류 지에 (劉 傑)

북경외국어대학교를 거쳐 1982년 동경대학교에 입학. 1993년 동경대학교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문학박사 학위 취득. 현재 와세다대학교 사회과학부·사회과학종합학술원 교수,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전공분야는 근대일본정치외교사, 근대중일관계사, 현대중일관계론, 현대중국론, 특히 중일 간에 드리워진 역사인식 문제와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상세하다.

주요 저작: 『日中戦争下の外交』(吉川弘文館, 1995), 『中国の強國構想一日清戦争後から現代まで』(筑摩書房筑摩選書, 2013) 등.

■ 조 광 (趙 瑛)

1945년 한국 서울 출생. 조선시대의 사상사, 사학사, 관계사를 전공. 고려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 동국대학교 국사교육과 교수,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문과대학장·박물관장, 연세대학교 석좌교수,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장, 한국사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주요 저작: 『조선후기사회의 전환기적 특성』, 『조선후기사회의 이해』, 『한국사학사의 인식과 과제』, 『조선후기 천주교사 연구』 등.

■ 거 자오광 (葛 兆光)

1950년 상해 출생. 1984년 북경대학교 대학원 문헌학 석사과정 수료. 1992년부터 칭화대학교 역사학부 교수. 2006~2013년 푸단대학교 문사(文史) 연구원 원장 및 교수, 현재 동 연구원 및 푸단대학교 역사학부 특별초빙교수. 교토대, 벨기에 르몬대, 타이완대, 미국 프린스턴대의 객원 교수 역임. 2009년 제 1 회 프린스턴 글로벌학자에 선발되었다. 전공분야는 중국사상사, 동아시아교류사.

주요 저작: 『中國思想史』, 『宅茲中國』, 『中國再考』(제 26 회 아시아태평양상 대상)

■ 미타니 히로시 (三谷 博)

1978년 동경대학교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국사학전문과정 박사과정 단위취득 퇴학. 동경대학교 문학부 조수, 학습원여자단기대학 전임강사·조교수를 거쳐, 1988년 동경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그 후 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교수 등을 역임. 현재 아토미학원(跡見學園) 여자대학교 교수, 동경대학교 명예교수. 문학박사(동경대학교). 전공분야는 19세기 일본의 정치외교사, 동아시아지역사, 내셔널리즘·민주화·혁명의 비교사, 역사학방법론.

주요 저작: 『明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幕末の外交と政治變動』(山川出版社, 1997), 『明治維新を考える』(岩波書店, 2012), 『愛国・革命・民主』(筑摩書房, 2013) 등. 공저로는, 『国境を越える歴史認識－日中対話の試み』(劉傑·楊大慶과 공저, 東京大学出版会, 2006) 등 다수.

■ 야오 케이스케 (八百啓介)

1982년 큐슈대학교 문학부 사학과 졸업. 1989년 큐슈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단위취득 퇴학. 문학박사. 1985~1987년 네덜란드정부 국비유학생으로서 라이덴대학교 역사학과에 유학. 1989년도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현재 기타큐슈시립대학교 교수.

전공분야는 일본 근세 대외교섭사, 식문화사.

주요 저작: 『近世オランダ貿易と鎖国』(吉川弘文館, 1998), 『砂糖の通った道一菓子から見た社会史一』(弦書房, 2011).

■ 하시모토 유 (橋本 雄)

1972년 동경 출생. 동경대학교 문학부 졸업. 2000년 동 대학원 박사과정 단위취득 퇴학. 2004년 문학박사 학위 취득.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 큐슈국립박물관 설립준비실 학예부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홋카이도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준교수.

전공분야는 중세 일본의 국제교류사·문화사.

주요 저작: 『中世日本の国際関係』(吉川弘文館, 2005), 『中華幻想』(勉誠出版, 2011), 『偽りの外交使節』(歴史文化ライブラリー, 吉川弘文館, 2012), 『“日本国王”と勘合貿易:なぜ、足利将軍家は中華皇帝に「朝貢」したのか』(さかのぼり日本史:外交篇[7]室町, NHK出版, 2013) 등.

■ **마츠다 마미코** (松田麻美子)

1974년 오사카 출생. 1995년 북경사범대학교 어학 유학. 1998년 고베대학교 국제문화학부 졸업. 2002년 중국희곡학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중국희곡문학). 2015년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석사과정 수료(국제관계학). 현재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연구과 박사과정 재학중.

주요 저작: 『中国の教科書に描かれた日本—教育の「革命史観」から「文明史観」への転換』(国際書院, 2017).

■ **쉬 정보** (徐 静波)

1956년 상해 출생. 1988년 푸단대학교 대학원 근대중국문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현재 푸단대학교 일본연구센터 부소장, 교수. 에히메(愛媛)대학교 외국인특별초빙교수, 고베대학교 대학원 국제문화연구과 초빙교수, 교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객원교수 등을 역임.

전공분야는 중일문화관계, 중일문화비교.

주요 저작: 『梁実秋—伝統への復帰』(復旦大学出版社, 1992), 『東風は西から吹いてくる——日本における中国文化』(雲南人民出版社, 2004), 『日本の食文化: 歴史と現実』(上海人民出版社, 2009), 『近代日本の文化人と上海 1923-1946』(上海人民出版社, 2013) 등 외에 공저, 편저, 역서 다수.

■ **정순일** (鄭 淳一)

1979년 한국 출생. 2004년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졸업, 2007년 동 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수료. 2008년 와세다대학교 아시아특별장학금의 지원을 받아 독일하여,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후기과정 입학. 2011년 아즈미 국제교류재단 장학생. 2013년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학위 취득. 와세다대학교 외국인연구원, 한국 명지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2016년 9월부터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전공분야는 일본고대사, 동아시아해역사.

주요 저작: 『九世紀の来航新羅人と日本列島』(勉誠出版, 2015), 『日本古代の外交文書』(공저, 八木書店, 2014), 『古代東アジアの「祈り」』(공저, 森話社, 2014) 등.

■ **김경태** (金 囙泰)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2010~2011년 동경대학교 대학원 일본문화연구전공(일본사학) 외국인연구생 연수. 201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 취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 연구교수.

연구분야로서는 전쟁의 파괴적 본성과 전쟁이 초래한 황무지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평화의 사이에 존재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작: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박사학위논문).



- 【日本語⇔中国語】 丁 莉 (北京大学)、宋 剛 (北京外国語大学)
- 【日本語⇔韓国語】 김범수 (東京学芸大学)、이혜리 (한국외국어대학교)
- 【中国語⇔韓国語】 李 麗秋 (北京外国語大学)、孫 興起 (北京外国語大学)

SGRA 리포트 지난 호 (號) 안내

- SGRA レポート01 設立記念講演録 「21世紀の日本とアジア」 船橋洋一 2001. 1. 30発行
- SGRA レポート02 CISV国際シンポジウ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への挑戦：多様性の中に調和を求めて」
今西淳子、高 偉俊、F. マキト、金 雄熙、李 來賛 2001. 1. 15発行
- SGRA レポート0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技術の創造」 畑村洋太郎 2001. 3. 15発行
- SGRA レポート04 第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の皆さんへ」 関 啓子、L. ビッヒラー、高 熙卓 2001. 5. 10発行
- SGRA レポート05 第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の新しい東アジア：経済協力をどう考えるべきか」
平川 均、F. マキト、李 鋼哲 2001. 5. 10発行
- SGRA レポート06 投稿 「今日の留学」「はじめの一步」 工藤正司 今西淳子 2001. 8. 30発行
- SGRA レポート07 第3回フォーラム講演録 「共生時代のエネルギーを考える：ライフスタイルからの工夫」
木村建一、D. バート、高 偉俊 2001. 10. 10発行
- SGRA レポート08 第4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 教育革命：ITは教育をどう変えるか」
白井建彦、西野篤夫、V. コストプ、F. マキト、J. スリスマンティオ、蔣 惠玲、楊 接期、
李 來賛、斎藤信男 2002. 1. 20発行
- SGRA レポート09 第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と民族主義：対話と共生をキーワードに」
ペマ・ギャルポ、林 泉忠 2002. 2. 28発行
- SGRA レポート10 第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とイスラーム：文明間の対話のために」
S. ギュレチ、板垣雄三 2002. 6. 15発行
- SGRA レポート11 投稿 「中国はなぜWTOに加盟したのか」 金香海 2002. 7. 8発行
- SGRA レポート12 第7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環境診断：地球の砂漠化を考える」
建石隆太郎、B. プレンサイン 2002. 10. 25発行
- SGRA レポート13 投稿 「経済特区：フィリピンの視点から」 F. マキト 2002. 12. 12発行
- SGRA レポート14 第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中の新しい東アジア」 +宮澤喜一元総理大臣をお迎えして
フリーディスカッション
平川 均、李 鎮奎、ガト・アルヤ・プートゥラ、孟 健軍、B. ヴィリエガス 日本語版2003. 1. 31発行、
韓国語版2003. 3. 31発行、中国語版2003. 5. 30発行、英語版2003. 3. 6発行
- SGRA レポート15 投稿 「中国における行政訴訟—請求と処理状況に対する考察—」 呉東鎬 2003. 1. 31発行
- SGRA レポート16 第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情報化と教育」 苑 復傑、遊間和子 2003. 5. 30発行

-
- SGRA レポート17 第10回フォーラム講演録 「21世紀の世界安全保障と東アジア」
白石 隆、南 基正、李 恩民、村田晃嗣 日本語版2003. 3. 30発行、英語版2003. 6. 6発行
- SGRA レポート18 第1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研究：国境を越える取り組み」 高橋 甫、貫戸朋子 2003.8.30発行
- SGRA レポート19 投稿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幕末期海軍建設の再検討と『海軍革命』の仮説」 朴 栄濬
2003.12.4発行
- SGRA レポート20 第12回フォーラム講演録 「環境問題と国際協力：C O P 3の目標は実現可能か」
外岡豊、李海峰、鄭成春、高偉俊 2004. 3. 10発行
- SGRA レポート21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アジア共同体構築に向けての日本及び韓国の役割について」2004. 6. 30発行
- SGRA レポート22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民族紛争－どうして起こるのか どう解決するか」 明石康 2004. 4. 20発行
- SGRA レポート23 第1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宮島喬、イコ・プラムティオノ 2004.2.25発行
- SGRA レポート24 投稿 「1945年のモンゴル人民共和国の中国に対する援助：その評価の歴史」 フスレ 2004. 10. 25発行
- SGRA レポート25 第14回フォーラム講演録 「国境を越えるE-Learning」
斎藤信男、福田収一、渡辺吉裕、F. マキト、金 雄熙 2005. 3. 31発行
- SGRA レポート26 第1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この夏、東京の電気は大丈夫？」 中上英俊、高 偉俊 2005.1.24発行
- SGRA レポート27 第1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軍事同盟の過去・現在・未来」
竹田いさみ、R. エルドリッジ、朴 栄濬、渡辺 剛、伊藤裕子 2005. 7. 30発行
- SGRA レポート28 第17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地球市民の義務教育-」
宮島 喬、ヤマガチ・アナ・エリーザ、朴 校熙、小林宏美 2005. 7. 30発行
- SGRA レポート29 第18回フォーラム・第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韓流・日流：東アジア地域協力における
ソフトパワー」 李 鎮奎、林 夏生、金 智龍、道上尚史、木宮正史、李 元徳、金 雄熙 2005. 5. 20発行
- SGRA レポート30 第1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文化再考－自由と市民社会をキーワードに－」
宮崎法子、東島 誠 2005. 12. 20発行
- SGRA レポート31 第2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雁はまだ飛んでいるか」
平川 均、渡辺利夫、トラン・ヴァン・トウ、範 建亭、白 寅秀、エンクバヤル・シャグダル、F. マキト
2006. 2. 20発行

-
- SGRA レポート 32 第2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ー留学生ー」
横田雅弘、白石勝己、鄭仁豪、カンピラパーブ・スネート、王雪萍、黒田一雄、大塚晶、徐向東、
角田英一 2006. 4.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33 第22回フォーラム講演録 「戦後和解プロセスの研究」 小菅信子、李 恩民 2006. 7.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34 第2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と宗教：宗教って何なの？」
島蘭 進、ノルマン・ヘイヴンズ、ランジャンナ・ムコパディヤーヤ、ミラ・ゾンターク、
セリム・ユジェル・ギュレチ 200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35 第24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ごみ処理と国境を越える資源循環～私が分別したごみはどこへ行くの？～」
鈴木進一、間宮 尚、李 海峰、中西 徹、外岡 豊 2007. 3.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6 第25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は教育を強化できるか」
高橋富士信、藤谷哲、楊接期、江蘇蘇 2007.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7 第1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若者の未来と日本語』」
池崎美代子、武田春仁、張 潤北、徐 向東、孫 建軍、朴 貞姫 2007. 6.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38 第6回日韓フォーラム in 葉山講演録 「親日・反日・克日：多様化する韓国の対日観」
金 範洙、趙 寛子、玄 大松、小針 進、南 基正 2007. 8. 31 発行
- SGRA レポート 39 第2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思想史～私たちの出会いと将来～」
黒住 真、韓 東育、趙 寛子、林 少陽、孫 軍悦 2007.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0 第27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アジアにおける外来種問題～ひとの生活との関わりを考える～」
多紀保彦、加納光樹、ブラチャヤー・ムシカシントーン、今西淳子 2008.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1 第2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いのちの尊厳と宗教の役割」
島蘭進、秋葉悦子、井上ウイマラ、大谷いづみ、ランジャンナ・ムコパディヤーヤ 2008.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42 第2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新疆講演録 「黄土高原緑化協力の15年—無理解と失敗から
相互理解と信頼へ—」 高見邦雄 日本語版、中国語版 2008.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主義」 平川均 2008. 3. 1 発行
- SGRA レポート 44 第29回フォーラム講演録「広告と社会の複雑な関係」 関沢 英彦、徐 向東、オリガ・ホメンコ
2008. 6.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45 第3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教育における『負け組』をどう考えるか～
日本、中国、シンガポール～」 佐藤香、山口真美、シム・チュン・キャット 2008.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46 第31回フォーラム講演録 「水田から油田へ：日本のエネルギー供給、食糧安全と地域の活性化」
東城清秀、田村啓二、外岡 豊 2009.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47 第3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オリンピックと東アジアの平和繁栄」
清水 諭、池田慎太郎、朴 榮濬、劉傑、南 基正 2008. 8. 8 発行
- SGRA レポート 48 第3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延辺&北京講演録 「一燈やがて万燈となる如く—
アジアの留学生と生活を共にした協会の50年」 工藤正司 日本語版、中国語版 2009. 4.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49 第3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が格差を縮めるか」
東 茂樹、平川 均、ド・マン・ホーン、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09.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0 第8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日韓の東アジア地域構想と中国観」
平川 均、孫 洌、川島 真、金 湘培、李 鋼哲 日本語版、韓国語 Web 版 2009.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1 第3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テレビゲームが子どもの成長に与える影響を考える」
大多和直樹、佐々木 敏、渋谷明子、ユ・ティ・ルイン、江 蘇蘇 2009. 1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2 第3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市民社会と21世紀の課題」
宮島 喬、都築 勉、高 熙卓、中西 徹、林 泉忠、ブ・ティ・ミン・チイ、
劉 傑、孫 軍悦 2010. 3.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3 第4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上海講演録 「世界的課題に向けていま若者ができること〜
TABLE FOR TWO〜」 近藤正晃ジェームス 2010. 4.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4 第37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エリート教育は国に『希望』をもたらすか：
東アジアのエリート高校教育の現状と課題」 玄田有史 シム チュン キャット
金 範洙 張 健 2010.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5 第38回フォーラム講演録 「Better City, Better Life ~東アジアにおける都市・
建築のエネルギー事情とライフスタイル~」 木村建一、高 偉俊、
Mochamad Donny Koerniawan、Max Maquito、Pham Van Quan、
葉 文昌、Supreedee Rittironk、郭 榮珠、王 劍宏、福田展淳 2010. 1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6 第5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中国の環境問題と日中民間協力」
第一部 (北京) : 「北京の水問題を中心に」 高見邦雄、汪 敏、張 昌玉
第二部 (フフホト) : 「地下資源開発を中心に」 高見邦雄、オンドロナ、ブレンサイン
201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7 第39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ポスト社会主義時代における宗教の復興」 井上まどか、
ティムール・ダダバエフ、ゾントーク・ミラ、エリック・シッケタンツ、島 蘭 進、陳 継東
2011. 12.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8 投稿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論への一試論」 平川 均 2011. 2. 15 発行

-
- SGRA レポート 59 第10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1300年前の東アジア地域交流」
朴亨國、金尚泰、胡潔、李成制、陸載和、清水重敦、林慶澤 2012.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60 第40回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の少子高齢化問題と福祉」
田多英範、李蓮花、羅仁淑、平川均、シムチャンキョット、F・マキト 2011.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61 第4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共同体の現状と展望」恒川恵市、黒柳米司、朴榮濬、
劉傑、林泉忠、ブレンサイン、李成日、南基正、平川均 2012.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62 第6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Sound Economy ～私がミナマタから学んだこと～」 柳田耕一
「内モンゴル草原の生態系：鉱山採掘がもたらしている生態系破壊と環境汚染問題」 郭偉
201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64 第43回フォーラム講演録 in 蓼科「東アジア軍事同盟の課題と展望」
朴榮濬、渡辺剛、伊藤裕子、南基正、林泉忠、竹田いさみ 2012.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65 第44回フォーラム講演録 in 蓼科「21世紀型学力を育むフューチャースクールの戦略と課題」
赤堀侃司、影戸誠、曹圭福、シム・チュン・キョット、石澤紀雄 2013. 2. 1 発行
- SGRA レポート 66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日英戦後和解（1994-1998年）」（日本語・英語・中国語）沼田貞昭
2013.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67 第12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太平洋時代における東アジア新秩序の模索」
平川均、加茂具樹、金雄熙、木宮正史、李元徳、金敬黙 201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68 第7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ボランティア・志願者論」
（日本語・中国語・英語） 宮崎幸雄 2014. 5.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69 第45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紛争の海から平和の海へー東アジア海洋秩序の現状と展望ー」
村瀬信也、南基正、李成日、林泉忠、福原裕二、朴榮濬 2014.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0 第46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インクルーシブ教育：子どもの多様なニーズにどう応えるか」
荒川智、上原芳枝、ヴィラーク ヴィクトル、中村ノーマン、崔佳英 2015.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1 第47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科学技術とリスク社会
ー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考える科学技術と倫理ー」
崔勝媛、島蘭進、平川秀幸 2015. 5.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72 第8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近代日本美術史と近代中国」
佐藤道信、木田拓也 2015. 10. 20 発行

- SGRA 레포트 73 第1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第48回SGRAフォーラム
「アジア経済のダイナミズム—物流を中心に」
李 鎮奎、金 雄熙、榎原英資、安 秉民、ドマン ホーン、李 鋼哲 2015. 11. 10 発行
- SGRA 레포트 74 第49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円卓会議「日本研究の新しいパラダイムを求めて」
劉 傑、平野健一郎、南 基正 他15名 2016. 6. 20 発行
- SGRA 레포트 75 第50回SGRAフォーラム in 北九州講演録「青空、水、くらし—環境と女性と未来に向けて」
神崎智子、齊藤淳子、李 允淑、小林直子、田村慶子 2016. 6. 27 発行
- SGRA 레포트 76 第9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フフホト&北京講演録「日中二百年—文化史からの再検討」
劉 建輝 発行予定
- SGRA 레포트 77 第15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これからの日韓の国際開発協力—共進化アーキテクチャの模索」
孫赫相、深川由紀子、平川均、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16. 11. 10 発行
- SGRA 레포트 78 第51回SGRAフォーラム「今、再び平和について—平和のための東アジア知識人連帯を考える—」
南基正、木宮正史、朴榮濬、宋均營、林泉忠、都築勉 2017. 03. 27 発行

■ 리포트를 원하시는 분은 SGRA 사무국 (Tel : 03-3943-7612 Email : sgra-office@aisf.or.jp)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SGRA리포트 No. 0079

제 52 회 SGRA 포럼

한국 · 중국 · 일본 ‘국사’ 대화의 가능성 (1)

編集 · 発行 (公財) 渥美国際交流財団関口グローバル研究会 (SGRA)

〒112-0014 東京都文京区関口3-5-8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SGRA ホームページ: <http://www.aisf.or.jp/sgra/>

電子メール: sgra-office@aisf.or.jp

発行日 2017年8月7日

発行責任者 今西淳子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본지 기사에 대한 문의나 인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락주세요.